

C2007-4 / 2007.3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김정호 김배성 이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7-4 / 2007.3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부연구위원 김 배 성
연구 원 이 용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연구자	담당분야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총괄, 결과 해석, 정책 제언
부연구위원 김 배 성	농업부문 총량지표 분석
연구원 이 용 호	주요지표 분석과 정리

머 리 말

이 연구보고서는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농업부문 비전 2030 마련을 위한 중장기 지표 개발”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이다. 정부는 2005년 6월에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작업을 거쳐 2006년 8월에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비전 2030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비전 2030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만든 대한민국 희망지도로서,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5년이나 10년 후의 모습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경영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전 2030 작업은 국가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농업 부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세부적인 작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비전 2030”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고 전망함으로써 농정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보고서가 관련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7.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현행 농정의 좌표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함.
- 이 연구는 “국가 비전 2030”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고 전망함으로써 농정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국가 비전 2030 개요

- 국가 비전으로 2030년경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지향함. 즉, 2010년까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경제·사회 제도를 혁신하여 2010년대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선진국권에 진입하며 2030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임
- 2030년의 주요 지표로서, 1인당 GDP는 4만 9천 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할 것임. 나라경제는 최첨단 기술의 핵심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어나며,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을 실현하고 사회복지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및 비전 실행계획을 추진함. 제도 혁신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임. 선제적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

충 분야와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임. 비전 실행계획은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의 5대 전략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농업부문의 중장기 추세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총량분석모형(KREI-ASMO)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산업적 지위는 2030년까지의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거시지표가 낙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생산액은 축산업 부문이 소폭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배업 부문에서 쌀 재배면적과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와 포도, 배, 감귤, 복숭아 등 과실류의 재배면적과 가격하락에 의해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의 농업 총생산액은 2005년 수준보다 약 12.7% 감소한 30조 6,46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개도국 시나리오, 이하 동일).
-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연평균 3~4% 속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2015년까지 감소 속도가 빠르다가 그 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농가 호수는 2005년 127만호에서 2030년 62만호로 감소하고, 농가 인구는 동기간 343만명에서 145만명으로 약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의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30년의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은 65%로 증가할 전망이다.
- 농가소득은 직접지불금 증가로 인해 이전소득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 29%에서 203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농가 수의 감소에 따라 증가 2030년에 6,92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 농업부문 2030 주요지표와 비전

- 농가인구 비중은 총인구의 3% 수준에 수렴하며, 농가호수는 대략 60만호 정도를 유지하고, 그 중 기간적 전업농이 20만호 정도가 될 것임. 농업생산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전체적으로 전업농의 생산 비중이 2/3 이상을 점유하고, 청장년 전업농 및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중심 세력을 형성할 것임.
- 농업총생산액의 GDP 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1.5% 내외로 수렴하며, 경지면적은 위기사 식량안보에 대비하여 140만ha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2030년에는 경지정리율 및 배수개선을 100%를 달성할 것임. 기초식량 자급을 기본으로 신선채소, 축산물, 과일 등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체제가 확립될 것임.
-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산지유통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처리 비중이 8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공동출하·공동계산제가 정착되고 선진적인 안전농식품 생산·유통체계가 구축될 것임. 또한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축산물 수출액은 2030년 100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임.
- 농가소득은 1인당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와 균형을 실현하고, 전업농 소득은 자영업자 수준을 상회할 것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접 지불액 비중이 2030년에는 20%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재해보험이 확대되어 전업농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임. 고령농업인은 2014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을 받아 농지임대수입을 포함하여 매월 고정수입이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임.
- 농촌은 복합생활공간 조성 등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를 억제하여 총인구의 15% 수준을 유지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넓어지며, 농촌마을 생활기초시설은 중소도시 수준으로 향상될 것임. 농촌관광은 2030년에 국내관광의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여 농촌지역산업으로 정착될 것이며, 단순한 도농교류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것임.

□ 비전 2030을 향한 정책과제

-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경영을 담당할 새로운 농업주체의 육성과 농가 정비가 필요하며, 농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후계자를 위한 농장리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고령은퇴 농가의 탈농지원을 위한 농지은행 위탁관리 제도화 및 경영이양직불제 확충도 중요함.
-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 농업의 생존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정책이 중요함. GAP과 생산이력제, 리콜제와 소비자보호 등의 국민건강을 위한 위생안전관리와 더불어 농식품의 신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함.
- 농업생산이 위축되는 추세이므로 미래의 농업소득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함. 한반도 전체의 친환경농업화를 통해 지속농업의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BT, IT, ET 등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전략적 수출단지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함.
- 전원시대의 농촌공간 정비와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주생활권 광역화가 필요하며, 정주체계상 인구부양력을 상실한 마을 등 정비 등 농촌지역의 계획적 재설계와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농촌고령인구를 위한 전원실버마을 조성과 아울러 노인요양 공동이용시설 등도 준비해야 함.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ng-Term Agricultural Indicators for the National VISION 2030

This study aims to develop main indicators that could be used for measuring industry changes and future progress expect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national strategy VISION 2030. The study also seeks to specify policy directions and formulate a proper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Korea under a long-term perspective.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sweeping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specification of rational and feasible goals, in addition to sound policies, is very important and essential.

The comprehensive national VISION 2030 has already been proclaimed and its goals are specified to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at the national level.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vision include such goals as the renovation of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and the formulation of policy directions for a continued economic growth that would enable Korea to become a progressive developed country. Specifically, the main indicators of the national VISION 2030 are as follows: The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will be about US\$ 49,000 (the same level as that of Switzerland today). The quality of life will be ranked within the top tenth in the world (the same rank as that of US today). The technological level will be enhanced to stand in par with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innovative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SMEs) and social service jobs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erms of human resources, too, Korea will be placed on the tenth level, whil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will be equal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so on.

In line with such overall goals of VISION 2030, this study proposes industry goals and presents an industry forecast along with major rural indicators such as agricultural total revenue, number of farm households, agricultural population, farm household income, etc. In addition, a set of policy op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achievement of the vision are suggested.

Researcher: Jeong-Ho Kim, Bae-Sung Kim, Yong-Ho Lee

e-mail Address: jhkim@krei.re.kr

목 차

요 약	i
Abstract	v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3
제2장 국가 비전 2030과 농업의 위상	5
1. 국가 비전 2030의 개요	5
2. 국가 비전과 농업의 위상	12
제3장 농업부문 총량지표 전망	14
1. 분석 방법	14
2. 주요지표의 전망 분석 결과	18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37
제4장 농업·농촌의 변화와 메가 트렌드	39
1.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39
2.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45
3. 농업·농촌의 미래 모습과 메가 트렌드	52

제5장 농업부문 2030 비전과 목표 설정	61
1. 농업·농촌의 미래상	61
2. 농업인력과 경영체의 비전	64
3. 농업생산의 비전	67
4. 농산물 유통과 소비의 비전	69
5. 농가소득의 비전	71
6. 농촌공간과 생활의 비전	74
7.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전망	76
제6장 농업 비전 2030을 향한 정책 과제	78
1. 2030년까지의 농정 여건	78
2. 비전 2030 준비를 위한 정책 과제	81
참 고 문 헌	88
부록1. 전국 인구 추계	89
부록2. 농촌인구(읍면인구) 전망	95
부록3. 농가인구 전망	101
부록4.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107
부록5.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112
부록6. 농업·농촌종합대책 주요사업 목표	115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국가 비전의 외국 사례	7
표 2-2. 우리나라 미래의 주요 지표	9
표 2-3. 균형성장 관련 지표 전망	9
표 2-4. 국제화 관련 지표 전망	10
표 2-5. 교육 및 사회인프라 관련 지표 전망	10
표 2-6. 농업부문 비전 실행계획	13

제 3 장

표 3-1. 전망 분석을 위한 시장개방 시나리오	16
표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19
표 3-3. 쌀과 과일류 소비량 전망	22
표 3-4. 주요 채소류 소비량 전망	22
표 3-5. 주요 축산물 소비량 전망	23
표 3-6.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전망	26
표 3-7. 농업총소득 전망	28
표 3-8. 농가소득 전망	31
표 3-9. 농업생산액 전망	33
표 3-10. 농업부문 GDP 전망	35

제 4 장

표 4-1.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40
표 4-2. 현재 농업·농촌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	40
표 4-3. 미래 농업·농촌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인식	41
표 4-4. 20년 후의 세계 식량수급 사정에 대한 전망	41

표 4-5.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	42
표 4-6. 우리 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한 조건	42
표 4-7. 농업인의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	43
표 4-8. 농업인의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43
표 4-9. 농업인의 농촌 거주 의향	43
표 4-10.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의향	44
표 4-11.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	44
표 4-12.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47
표 4-13. OECD 주요국의 농업 비중(2005년 기준)	48
표 4-14. 산업사회 단계와 농업의 변화	58
표 4-15. 농업·농촌의 메가 트렌드 요약	59

제 5 장

표 5-1. 농촌인구와 농가인구 전망	64
표 5-2. 농업인력·경영체의 비전과 목표	67
표 5-3. 영농형태별 농가수 전망	68
표 5-4. 농업생산의 비전과 목표	68
표 5-5. 농식품 유통·소비의 비전과 목표	70
표 5-6. 농가소득의 비전과 목표	73
표 5-7. 농림어가 규모별 마을 수(2005년)	74
표 5-8. 농촌공간·생활의 비전과 목표	75
표 5-9. 농어촌관광사업 운영 마을수	77
표 5-10. 농촌관광 수요 전망	77

제 6 장

표 6-1. 과거 농정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의 비교	83
------------------------------------	----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국가 비전의 시기 구분	8
----------------------------	---

제 3 장

그림 3-1. KREI-ASMO 모형의 구조	15
그림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20
그림 3-3. 주요 농산물 소비량 전망	23
그림 3-4.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전망	26
그림 3-5. 농업총소득 전망	29
그림 3-6. 농가소득 전망	31
그림 3-7. 농업생산액 전망	34
그림 3-8. 농업부문 GDP 전망	3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현행 농정의 좌표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함.
- 참여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의 농업부문에 대한 장기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기존 작업(기획예산처 주관)에서 농업부문은 미미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충실하게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비전과 연계하여 농업·농촌의 장기 비전에 대한 주요지표를 개발하고 전망함으로써 농정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WTO/DDA 및 FT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등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분석함.

- 정부의 농정 방향 및 농업부문 재정지출 계획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주요 지표를 전망함.
- 이 연구는 “국가 비전 2030”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고 전망함으로써 농정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검토

- 1990년대 중반 이후에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검토가 추진되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1997.
 - 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 『21세기 선진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19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과 농정 비전 전략시책』, 199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199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2001.
- 참여정부 들어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이 수립되어 10년 후인 2013년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 투융자계획이 마련되었음.
 -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농림부의 “21C 농업농촌 비전과 발전전략”(2001.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2002.12) 등에서 중장기 비전과 농정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연초에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주목적

인 품목별 농업관측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농업·농촌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 총량 전망모형(KREI-ASMO)을 이용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 지표(농업생산액,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가호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산물 소비 등)를 총계된 수준에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외국에서도 농업의 중장기 비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2005년에 농촌지역의 장기 전망과 발전전략을 모색함.
 - 네덜란드 농업부는 2004년에 농촌에 대한 2013년까지의 비전과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함.
 - 중국 농업대학교는 2004년에 농업 부문에 대한 2050년의 비전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정책 방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함.
 - 일본 정부는 2005년에 경제사회 각 부문의 “2030년 비전”을 수립하면서 농업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함.

3.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추세 분석에 기초한 연역적 추론 방식을 채용함. 즉, 농업·농촌의 주요 지표에 대한 추세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치를 토대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비전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임.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소 보수적인 측면은 있으나 현실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음.
- 이 보고서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정부가 2007년 8월에 발표한 “국가 비전 2030”의 개요를 정리함. 즉 비전 2030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 안에 담고 있는 농업 부문의 내용을 정리함.
- 제3장에서는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주요 지표의 추세를 전망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부문 총량모형(KREI-ASMO)을 이용하여 시장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농가인구, 농가호수, 농림업취업자, 경지면적, 재배면적,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생산액, 농업GDP 등을 추정함. 그리고 이러한 추정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함.
- 제4장에서는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와 거대한 흐름인 메가 트렌드를 검토함.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을 검토하여 앞으로 농업·농촌이 변화할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제5장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비전 및 목표를 검토함. 제3장에서 분석한 개도국 시나리오의 추세 전망치와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제시한 2013년까지의 정책 목표를 감안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어 분야별로 나누어 농업인력과 경영체,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소비, 농가소득, 농촌공간과 생활 등의 분야별로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
- 제6장에서는 농업 비전 2030을 향한 정책 과제를 제안함. 즉, 2030년까지의 농정 여건을 검토하고 그 연장선에서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간략히 검토함.

제 2 장

국가 비전 2030과 농업의 위상

1. 국가 비전 2030의 개요

1.1. 추진 배경

- (상황 인식)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세계화 등 장기·구조적인 도전 요인에 직면
 -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응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대내외 도전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전환기의 부담 가중
 -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자리, 생계, 노후 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저출산·저소비·저성장으로 연결
 - 그러나 이러한 도전요인 자체보다는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 미리 준비하지 못해 지금 저출산, 연금 문제 등에 직면
 - 저출산 문제 : 1983년에 이미 출산율 2.08명 → 현재 세계 최저

1.08명

- 국민연금 : 최초 설계 잘못, 1990년대 후반부터 문제 제기 → 논의만 무성, 해결책 담보

□ **(대응의 시급성)** 도전요인의 성격, 정책 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 인구가 감소(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이전에 장기·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
 - * 인구성장률은 2005년 현재 0.21%, 2010년 0.26%에서 점차 둔화하여 2018년 0.02%에 도달한 후 2019년(-0.00%)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0.25%, 2050년 -1.07%로 전망
- 이 기간 동안의 대응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발전 궤도 및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이 결정될 전망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 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
 - * 저출산 대책은 지금 시행하여도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20~30년 정도의 시차 발생

□ **(현행 대응방식의 한계)**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보다 현안 해결이나 부분적·단편적 준비에 치중

- 과거 정부주도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 전략기능이 약화
 - 개발연대의 권위주위는 해체되었으나, 국가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건전한 권위 창출에는 한계
- 경제·사회·정치·문화를 망라한 제도 혁신의 큰 밑그림을 준비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

□ (장기 비전의 필요성)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

-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장기적 시계에서 수립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의 대응에 한계
 -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도 1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통해 미래 대비

표 2-1. 국가 비전의 외국 사례

국가	국가 비전	추진전략
영국	Opportunity for all in a World of 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및 경쟁촉진 · IT 인력양성, 직업훈련체계 개편 · 성공적 클러스터 발굴·지원
일본	A New Era Dynamism - Closer Ties and a Wider Range of Opportun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의 선순환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구축
EU	2010년까지 세계최고의 지식기반경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R&D 투자 확대 및 혁신 강화
중국	2020년 전면적 小康* 국가 * 부유하지 않으나 기본수요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혁을 통한 성장의 질 개선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대외개방 확대 등 경제의 국제화
싱가포르	Dynamic Global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유연성 확보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대만	Green Silicon I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R&D·첨단제품 생산거점 등
아일랜드	지속성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필요한 직업훈련 강화 · 투자재원의 지역간 균등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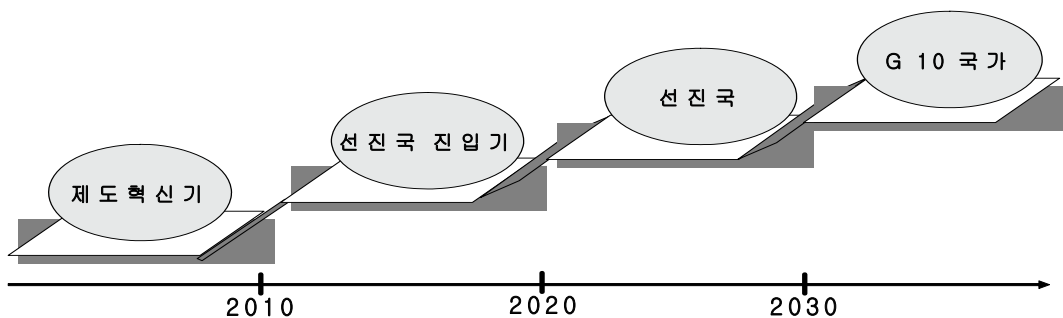
- 이제 정부는 국가 계획자(nation-planner)에서 비전 제공자(vision-provider)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필요
 -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비전의 실천력을 확보
 - * 설문조사('06.1, KDI) 결과, 전문가 97%, 일반국민 94%가 장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1.2. 주요 내용

□ 비전과 전략: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3대 목표와 5대 전략

- 국가 비전을 “함께가는 희망한국”으로 설정하고, 비전의 3가지 목표 상으로 ①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②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①성장동력 확충, ②인적자원 고도화, ③사회복지 선진화, ④사회적 자본 확충, ⑤능동적 세계화 등을 설정함.
- 2010년까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경제·사회 제도를 혁신하여 2010년대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며, 2030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임.

그림 2-1. 국가 비전의 시기 구분



□ 미래 한국의 모습: 2030년경 세계 일류국가 진입

- 1인당 GDP는 2030년 4만 9천 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은 2030년 10위로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

표 2-2. 우리나라 미래의 주요 지표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비 고 ²⁾ ('05 기준)
· GDP 규모 ¹⁾ (십억불)	788 (788)	1,122 (1,262)	1,824 (2,567)	2,406 (4,145)	· 미국 12,486 일본 4,571 · 영국 2,201 이태리 1,766
· 1인당 GDP ¹⁾ (천불)	16 (16)	23 (26)	37 (51)	49 (84)	· 노르웨이 64 스위스 50 · 미국 42 일본 36
· 국가경쟁력(순위)	29	17	13	8	· 미국 1위 싱가포르 3위 · 호주 9위 일본 21위
· 삶의 질(순위)	41	30	20	10	· 호주 1위 스위스 4위 · 미국 14위 일본 35위
· 총인구(십만명)	483	492	500	493	

주: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기획예산처·조세연구원 공동추계), ()안은 경상가격 기준
2) 자료 : GDP관련(IMF), 국가경쟁력·삶의질(IMD), 총인구(통계청)

- 우리경제는 최첨단 기술의 핵심강국으로 부상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2030년 66%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어남.

표 2-3. 균형성장 관련 지표 전망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 원천기술 특허(연구원 천명당)	4.5	10	20	30
· 부품개발 기술수준(일본=100)	84.3	93.9	98.0	105.0
·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	56.3	58.7	62.3	66.3
· 혁신형 중소기업(만개)	1	3	6	9
·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	13.1	16.7	21.0	25.0

- 국제적으로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실현하고 경제역량, 국가이미지 등 모든 부문이 크게 개선되어 세계 선도 국가(Global Leading Country)로 부상함.

표 2-4. 국제화 관련 지표 전망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 FTA체결국 수(개국)	2	15	25	50
· 국가이미지 순위(위)	34	24	10	5
· 금융업 GDP기여율(%)	8	10	14	20
· 항만컨테이너 화물처리량 (만TEU/년)	1,522	2,460	4,740	6,600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과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을 실현하고, 사회복지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

표 2-5. 교육 및 사회인프라 관련 지표 전망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 IMD 교육경쟁력 순위(위)	40	30	20	10
· 평생학습 참여율(%)	22	30	40	50
· 세계100위권내 대학수(개)	1	2	4	6
· 생계급여 수급률(%)	3.0	3.4	3.5	3.5
· 주거급여 수급률(%)	3.0	3.4	5.3	5.3
· 공적연금 수급률(%)	16.6	30.4	47.0	65.5
· 건강보험 보장률(%)	65	72	80	85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62	42	38	37
· 방과후활동 수혜율(%)	32	67	72	75
· 합계 출산률(%)	1.08	1.3	1.6	1.8

□ 비전 실현수단: 제도혁신 · 선제적 투자와 비전 실행계획

- 제도 혁신 :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 현행 성장시스템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곤란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 생애 생산성 극대화 : 정년 조정 및 임금 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등
 - 잘못 설계된 제도 유지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재정 투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
 - 재정 위험요인 사전 제거 : 국민연금, 직역연금 개혁 등
 - 복지제도 효율성 제고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 낮은 시민의식, 불투명한 공적제도로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
 -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

- 선제적 투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분야,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
 - 활력있는 경제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 분야
 -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해외 고급인력 활용 등
 -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양극화 해소 및 국민 통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
 - 방과후 활동 확대, 주거복지 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 국가안전, 예상치 못한 통일대비 등의 분야
 - 국방개혁, 통일 인프라 구축 등

- 비전 실행계획 : 5대 전략별로 정책 목표, 실천 과제, 지표, 국제 비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 성장동력 확충 : 성장 선도부문과 성장 지체부문의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 혁신주도형 산업구조 실현
- 인적자원 고도화 :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
- 사회복지 선진화 : 기본수요 충족과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
- 사회적 자본 확충 :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성숙한 사회 건설
- 능동적 세계화 : 사회·문화의 폭넓은 개방으로 돈·사람·정보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열린사회 조성

2. 국가 비전과 농업의 위상

□ 국가 비전에서 농업부문은 제한적으로 다루어짐

- 비전 2030 작업은 국가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농업 부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졌음.
 - 농업인의 미래 모습을 생활환경과 복지환경 및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농업인의 미래 모습을 제시

-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에서는 미래 국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농업인의 미래 모습으로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제시하고 있음.
 - 생활환경 : 도로·주택·상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이 구축된 농어촌
 - 복지환경 : 교육·문화·복지 확충으로 살기좋은 농어촌
 - 소득보장 :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

□ 농업부문 비전 실행계획을 제시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로서 농가소득 안정, 농업체질 강화, 생산기반·유통 개선, 농어촌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현재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여건 변화에 맞게 보완 발전시키도록 함.

표 2-6. 농업부문 비전 실행계획

정책 목표	실천과제	지표 전망			근거/국제비교	
		지표명	'05	'10		'30
농가 소득 안정	· 직접지불제 확대	· 직접지불제 투융자비율(%)	12.4	20.7	30.0	·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라 직불비중 확대 * EU 69%, 미국26('05)
	· 농작물 재해보험	· 재해보험 가입률(%)	23.4	26.0	36.0	· 매년 0.5% 증가 * 일본 25%('01), 미국 72.7%('00)
농업 체질 강화	· 쌀 전업농 육성	· 쌀 전업농 생산비중(%)	30	41	79	· 일본 44%('00) 60%(10계획)
	· 친환경농업 확대	· 친환경인증 농산 물 생산비율(%)	4	10	20	· '11년 이후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만 인증
생산 기반 · 유통 개선	· 재해대비 안전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배수개선율(%)	68.8	81.3	100	· 2013년까지 배수 개선 완료
	·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	·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처리비중(%)	26.8	40.0	80.0	· '30년까지 산지 유통전문조직이 전체물량의 80%처리
생활 기반 확충	·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주거 등 농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어촌마을개발 (권역)	36	216	1,000	· '17년까지 1,000개 권역 착수

자료: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정부·민간합동 작업단, 2006.8)에서 정리.

제 3 장

농업부문 총량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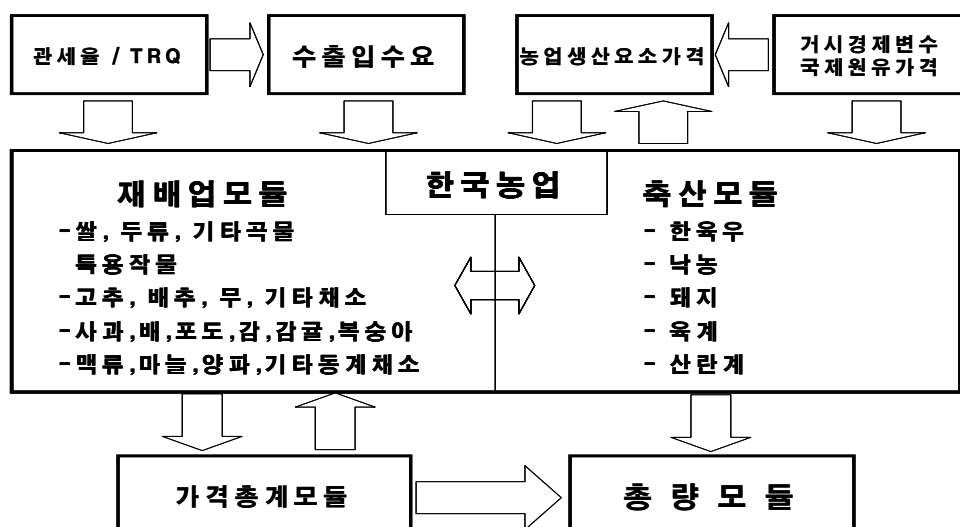
1. 분석 방법

1.1. KREI-ASMO 전망 분석의 의미

- WTO/DDA, FTA 농업협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여건 변화 및 쌀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과실류 일부 품목의 폐원제 도입, 동식물 위생검역 실시 등 대내외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중장기 변화가 예상됨.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부문 주요 지표를 전망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부문 전망 모형인 KREI-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용함.
- KREI-ASMO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망부문, 재배업부문 전망부문, 축산부문 전망부문, 총량부문 전망부문 등 크게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세부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주요 거시변수부문은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전망하도록 구성되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

- 를,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 KDI 등 관련기관 전망치 또는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 투입재가격 전망부문은 농기구가격, 경상재가격, 투입재가격, 농업노임, 농지임차료 등을 전망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이중 농기구, 경상재, 투입재 가격은 앞서 전망된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나, 농업노임과 농지임차료는 거시변수 부문과 더불어 재배업부문과 연계되어 전망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재배업부문은 크게 하계 재배 작목, 과수작목, 그리고 동계 재배 작목으로 구분됨. 하계 재배 작목과 동계 재배 작목은 생산자의 재배 작목 선택의 상충(trade-off)관계가 반영되도록 연립방정식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하계 작목중 하계노지채소는 다시 주요 채소 작목으로 세분되어 채소 작목들간 경합관계가 반영되도록 별도로 설정되어 있음.
 - 과수부문의 작목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그리고 복숭아 6개 작목이고, 각 작목은 별도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각 수요와 공급부분에서 작목간 대체관계가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 KREI-ASMO 모형의 구조



1.2. 전망 분석의 전제 조건

□ 전망 시나리오 설정

- 농업부문 주요 지표의 증장기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시장개방 여건 및 정책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그러나 DDA 농업협상 및 한·미 FTA 농업협상 등이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분석을 위해 이들 협상의 타결 내용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여기서는 최근까지 협상과정에서 제안된 안들을 고려해서 DDA 개도국 대우 적용의 경우(시나리오 1)와 DDA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시나리오 2)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분석함.

표 3-1. 전망 분석을 위한 시장개방 시나리오

시장 개방폭		선진국	개도국
일반품목	관세구간	20/50/75%	30/80/130%
	관세감축	45/55/65/75%	25/30/35/40%
	관세상한	100%	150%
민감품목	TRQ품목	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	마늘, 감귤, 사과, 포도
	관세감축	일반감축률의 70%	50%
	관세상한	100%(쌀은 2015년 이후 적용)	150%
	TRQ증량	2002~04년 평균 소비량의 6% (쌀은 2014년까지 408천톤 증량)	4% 증량 및 신설
특별품목	품목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관세감축		10%(쌀 제외)
	TRQ증량		증량 없음

- 쌀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2008년 WTO/DDA 협상이 타결되어, 2009년부터 관세화 추가개방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개도국 대우가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음(시나리오 1).

- 협상결과, 쌀은 예외로 관세화 유예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특별품목(고추, 쇠고기, 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2009~2018년 10년 동안 관세율을 10% 감축하고(TRQ 증량 없음), 민감품목(마늘, 감귤, 사과, 포도 등)에 대해서는 2009~2018년 동안 일반품목의 관세감축율의 50% 수준만을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함(관세상한 150%, TRQ는 2002~2004년 평균소비량의 4%까지 증량). 2018년 이후는 2018년 감축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구간을 30%-80%-130%로 구분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관세 감축율은 25%(0~30%구간), 30%(31~80%구간), 35%(81~130%구간), 40%(131% 이상 구간)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관세상한 150%).
- 추가해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비교분석을 위해 DDA 협상에 따른 선진국 대우 적용과 동시에 한미 FTA가 체결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함(시나리오 2). 선진국 대우 적용시에 대한 시나리오 내역은 위의 표 참조.
- 한·미 FTA 시나리오의 이행기간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현행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상황을 가정함. 다만, 쌀은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함.

□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

- 2007 이후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들의 전망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07~2009년 4.4%, 2010 이후 4.3%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2.6%, 이후에는 3%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환율은 2006년 원/달러 환율이 956원이나,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요 전망기관들의

전망에 따라 2007년 925원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목표가격 170,083원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이외 직불금은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에 의해 직불금 예산계획(2013년 3조 3,104억원)을 반영하고, 이후는 직불금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URAA)에 따른 쌀에 대한 특별조치를 2014년까지 추가 연장함. 다만, 유예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을 적용함.
- 쌀 MMA 도입량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 40만 8,700톤(1988~1990년 평균소비량의 7.96%)까지 증량. MMA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이고, 수입방식은 기존의 국영무역방식으로 함.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매년 MMA 도입물량의 10%에서 시작해서 2010년 30%까지 확대하고, 이후 연도는 30% 유지를 유지함.
-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에 대해, 사과와 배는 2012년 이후에, 감귤과 복숭아는 2013년 이후에 각 시나리오에서 모두 식물검역 조치가 해제되는 상황을 가정함.

2. 주요지표의 전망 분석 결과

2.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변화

-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모두 현재수준에 비해 2015년까지

감소 속도가 보다 증가하고, 이후에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됨. 2030년 기준으로 농가호수 연평균 감소율은 DDA 개도국의 경우에 비해 DDA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약 1.1% 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개도국의 경우 약 62만호,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53만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 농가인구는 2005년까지는 연평균 3.2~3.6%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 속도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4.9~5.1%까지 증가하고, 2030년에는 2.6(시나리오 1)~4.0%(시나리오 2)로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약 146(시나리오 1)~118만명(시나리오 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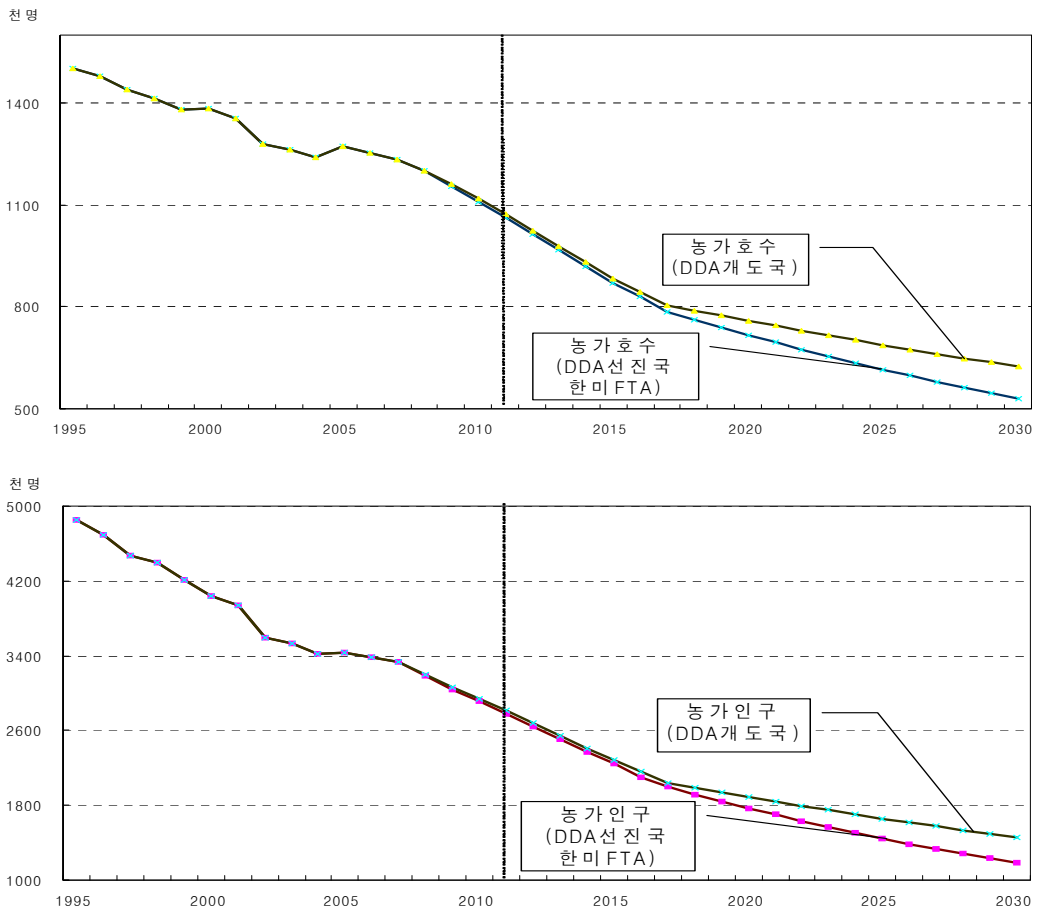
표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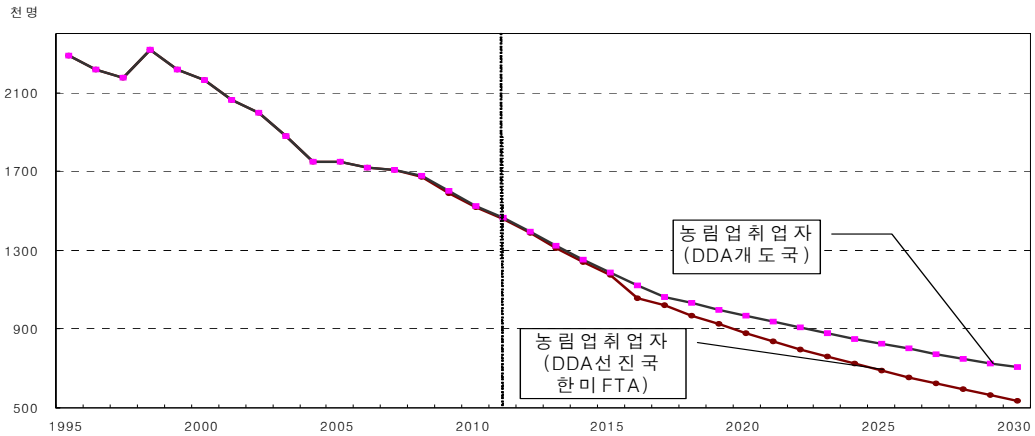
단위: 천호, 천명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1995		1,501	4,851	2,289
2000		1,383	4,031	2,162
2005		1,273	3,433	1,747
DDA 개도국	2010	1,118	2,941	1,524
	2015	883	2,284	1,186
	2020	759	1,890	967
	2030	624	1,458	705
변화율	2000-2010	-2.1	-3.1	-3.4
	2010-2020	-3.8	-4.3	-4.4
	2020-2030	-1.9	-2.6	-3.1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1,110	2,913	1,516
	2015	871	2,245	1,175
	2020	716	1,768	879
	2030	529	1,181	538
변화율	2000-2010	-2.2	-3.2	-3.5
	2010-2020	-4.3	-4.9	-5.3
	2020-2030	-3.0	-4.0	-4.8

- 농림업취업자는 개도국 대우 적용의 경우에 비해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관세감축율로 인한 농업 부분 축소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30년 개도국 대우 적용의 경우 약 71만명 수준,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약 54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2.2. 주요 농산물 소비량 전망

- 쌀을 포함해서 주용 농산물 소비량 전망결과, 시나리오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시나리오별로 개도국 대우 적용의 경우 보다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관세감축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으로 1인당 소비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 기준으로 쌀 1인당 소비량은 약 60~61.5kg까지 현재 감소추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사과와 포도는 현재수준을 유지, 배는 1.3~1.8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양념채소류중 고추는 2030년에도 거의 현재 소비수준을 유지하나, 배추, 무, 마늘은 다소 감소, 양파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고추는 약 4.2kg, 배추는 약 24kg, 무는 약 9.6kg, 마늘은 약 8kg, 양파는 약 29kg 수준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3-3. 쌀과 과일류 소비량 전망

		단위: kg			
		쌀	사과	배	포도
1995		105.9	15.8	3.9	7.0
2000		94.1	10.4	6.7	10.3
2005		80.7	7.5	8.7	8.2
DDA 개도국	2010	74.4	8.3	8.1	6.6
	2015	71.1	6.9	7.7	7
	2020	67.1	7	7.4	7.3
	2030	60.1	7.4	6.9	8
변화율	2000-2010	-2.3	-2.2	1.9	-4.4
	2010-2020	-1.0	-1.7	-0.9	1.0
	2020-2030	-1.1	0.6	-0.7	0.9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74.4	8.3	8.1	6.6
	2015	73.8	7.3	7.8	7.1
	2020	68.7	7.9	7.7	7.4
	2030	61.5	8.3	7.4	8.2
변화율	2000-2010	-2.3	-2.2	1.9	-4.4
	2010-2020	-0.8	-0.5	-0.5	1.2
	2020-2030	-1.1	0.5	-0.4	1.0

표 3-4. 주요 채소류 소비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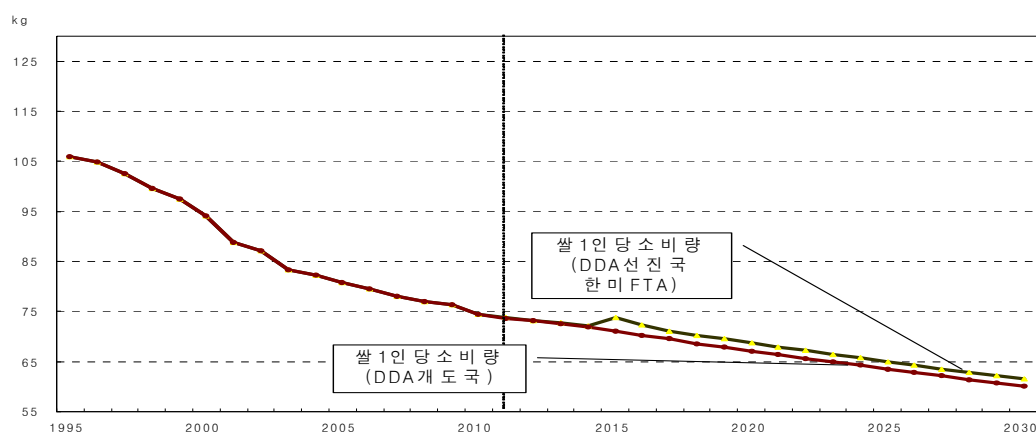
		단위: kg				
		고추	배추	무	마늘	양파
1995		4.4	38.1	17.8	10.0	21.2
2000		4.3	34.4	18.8	10	18.9
2005		4.5	25.4	12	8.6	22.3
DDA 개도국	2010	4.4	26	10.7	8.3	22.8
	2015	4.4	25.7	10.3	8.3	24.5
	2020	4.4	25.5	10.1	8.3	26.3
	2030	4.2	24.3	9.6	8.1	28.9
변화율	2000-2010	0.2	-2.8	-5.5	-1.8	1.9
	2010-2020	0.0	-0.2	-0.6	0.0	1.4
	2020-2030	-0.5	-0.5	-0.5	-0.2	0.9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4.7	26.1	10.7	8.4	22.5
	2015	5.4	26	10.3	8.7	26.3
	2020	5.3	26.2	10.1	9.1	28
	2030	4.9	25.3	9.7	8.8	29.6
변화율	2000-2010	0.9	-2.7	-5.5	-1.7	1.8
	2010-2020	1.2	0.0	-0.6	0.8	2.2
	2020-2030	-0.8	-0.3	-0.4	-0.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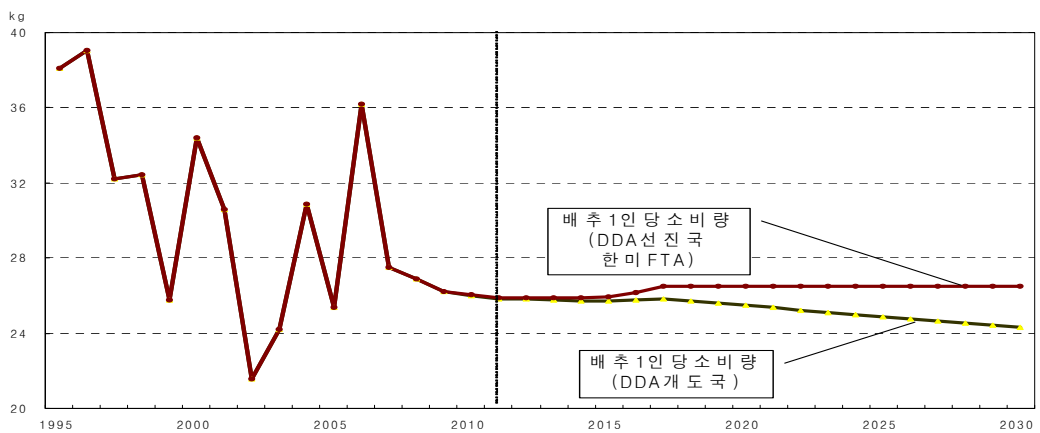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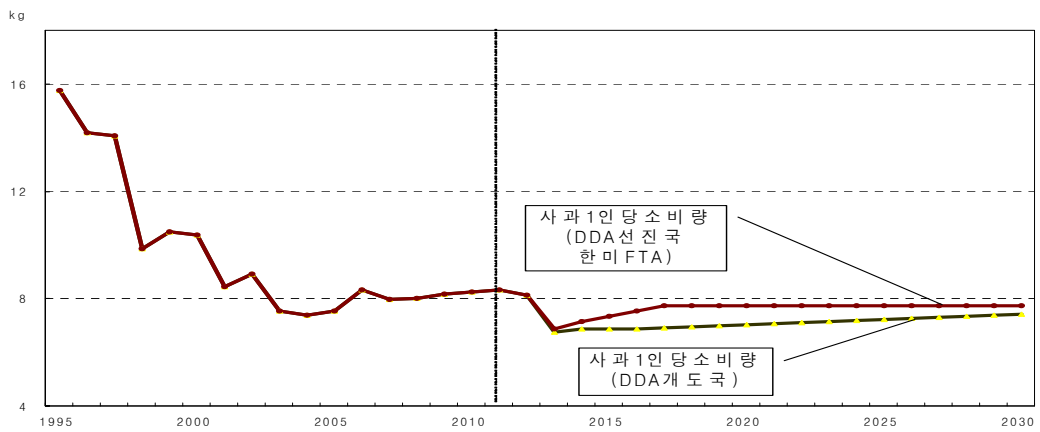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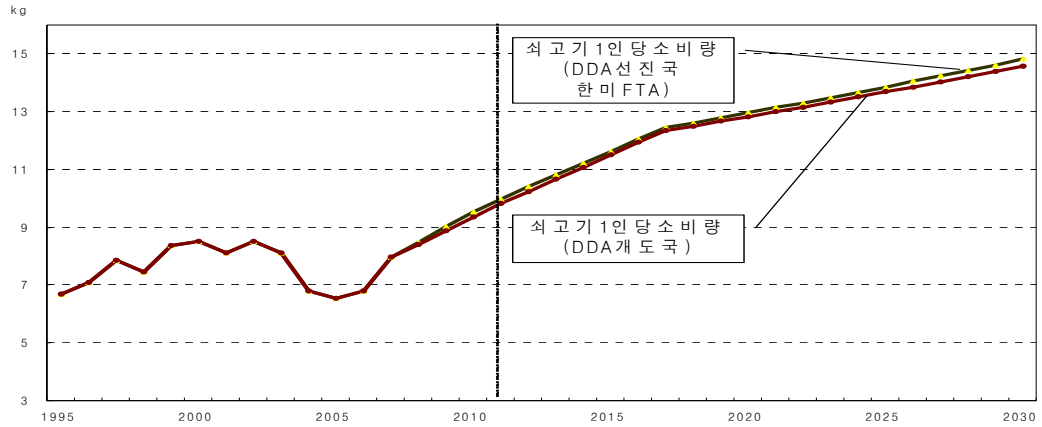
표 3-5. 주요 축산물 소비량 전망

		단위: kg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995		6.7	14.7	6.0
2000		8.5	16.5	6.9
2005		6.6	17.4	8
DDA 개도국	2010	9.4	18.1	9
	2015	11.5	19.2	9.7
	2020	12.8	20.5	10.6
	2030	14.6	22.9	12.8
변화율	2000-2010	1.0	0.9	2.7
	2010-2020	3.1	1.3	1.6
	2020-2030	1.3	1.1	1.9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9.5	18.2	9.2
	2015	11.6	19.3	9.8
	2020	13	20.6	10.8
	2030	14.8	23.2	13.2
변화율	2000-2010	1.1	1.0	2.9
	2010-2020	3.2	1.2	1.6
	2020-2030	1.3	1.2	2.0

- 주요 축산물 소비량은 현재와 같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14.6kg, 돼지고기는 약 23kg, 닭고기는 약 13kg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3. 주요 농산물 소비량 전망





2.3. 경지면적, 총재배면적, 쌀, 채소, 과실 재배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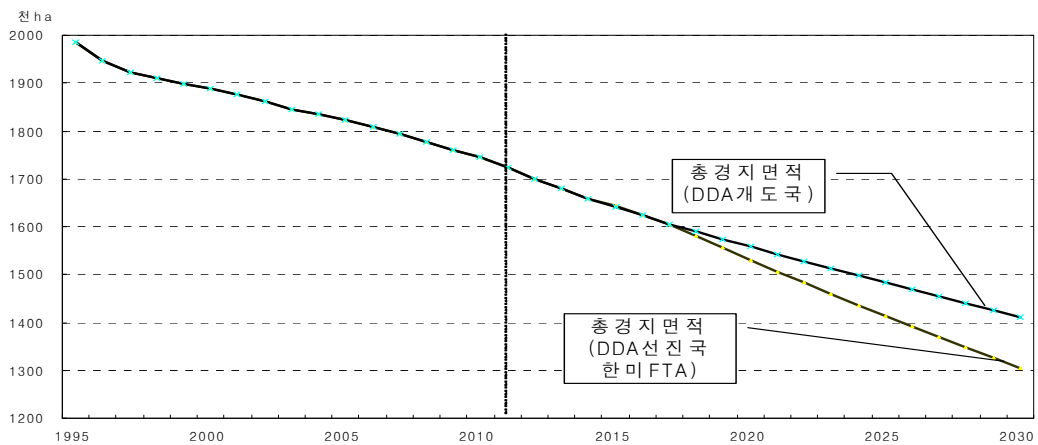
- 경지면적과 총재배면적은 2015년까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이는 쌀이 관세화 유예될 뿐만 아니라,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여, 쌀 이외 품목의 면적 감소가 일부 쌀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2020년 이후에는 쌀 이외 품목과 더불어 쌀 관세화로 쌀 재배면적도 감소하여, 2030년에는 총경지면적이 약 141만ha, 총재배면적은 약 144만ha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쌀 재배면적은 2015년까지는 쌀 관세화 유예가 적용되어, 면적 감소율이 연평균 1% 내외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관세화가 적용될 경우 보다 감소율이 증가하여, 2030년 약 74만ha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류 면적은 중장기에 정채내지 감소하는 품목(고추, 마늘, 배추, 무, 시설펀치 등)과 증가하는 품목(양파 등)에 따라 향후 연평균 감소의 특징을 보이지 않음. 2030년 채소 면적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된 27만 5천ha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과실류 면적은 사과 면적이 중장기에 현재 수준을 유지내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외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등 대부분의 품목면적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식물검역 해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 2005년 보다 약 29% 감소한 약 11만ha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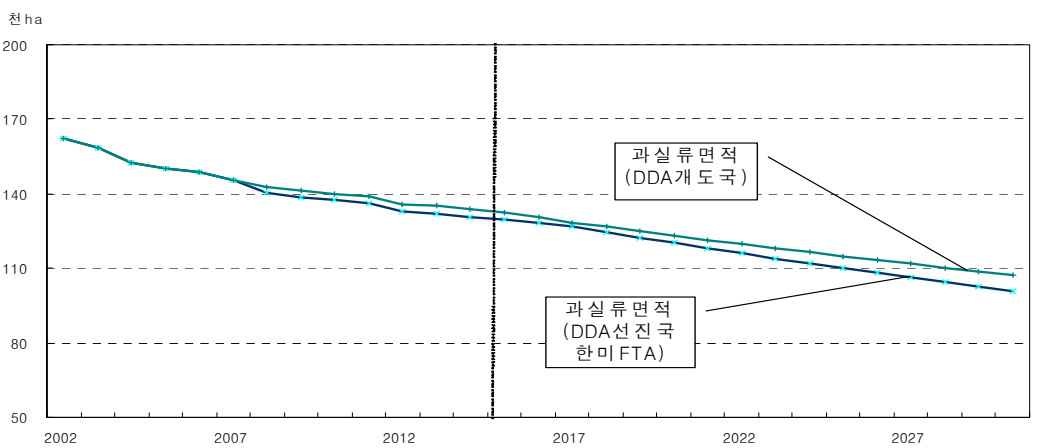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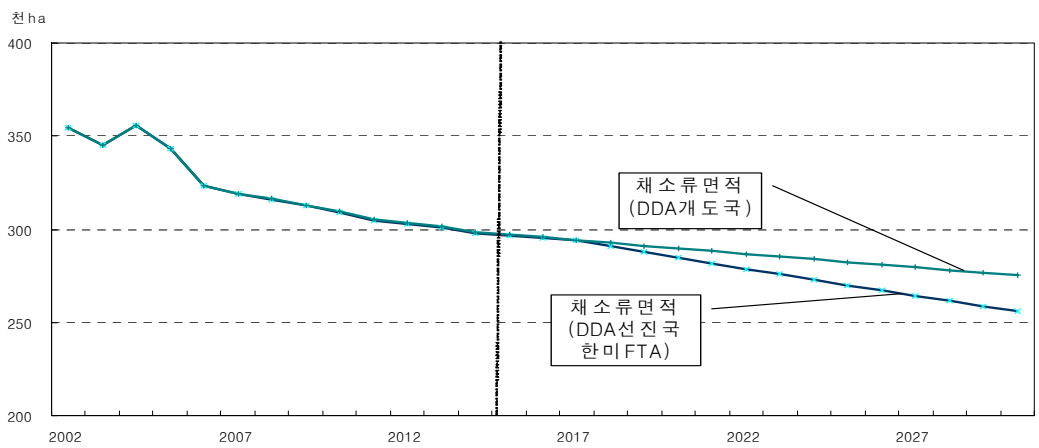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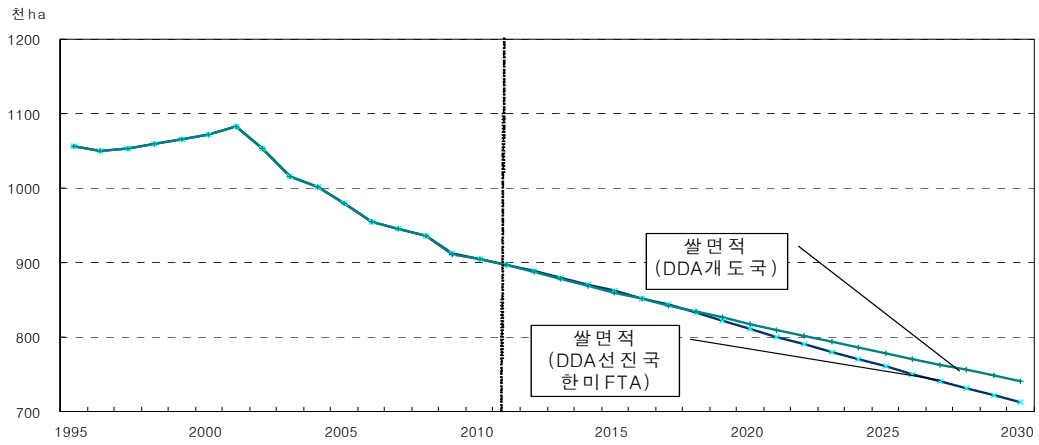
표 3-6.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총경지면적	총재배면적	쌀면적	채소류면적	과실류면적
1995		1,985	2,197	1,056	426	172
2000		1,889	2,098	1,072	412	169
2005		1,824	1,921	980	343	150
DDA 개도국	2010	1,745	1,817	905	310	140
	2015	1,641	1,695	860	297	133
	2020	1,558	1,599	818	290	123
	2030	1,411	1,435	741	275	107
변화율	2000-2010	-0.8	-1.4	-1.7	-2.8	-1.9
	2010-2020	-1.1	-1.3	-1.0	-0.7	-1.3
	2020-2030	-1.0	-1.1	-1.0	-0.5	-1.4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1,745	1,813	905	309	137
	2015	1,644	1,689	863	297	130
	2020	1,531	1,562	811	285	120
	2030	1,305	1,314	712	256	101
변화율	2000-2010	-0.8	-1.4	-1.7	-2.8	-2.1
	2010-2020	-1.3	-1.5	-1.1	-0.8	-1.3
	2020-2030	-1.6	-1.7	-1.3	-1.1	-1.7

그림 3-4.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전망





2.4. 농업총소득 변화

- 농업총소득은 축산업부문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중이 높은 재배업부문에서 재배면적 감소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향후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감축폭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 농업총소득은 2005년 수준보다 약 40% 감소한 9조 1,7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 대우와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보다 2조 3,000억이 더 감소한 6조 8,620억 수준으로 전망됨.

표 3-7. 농업총소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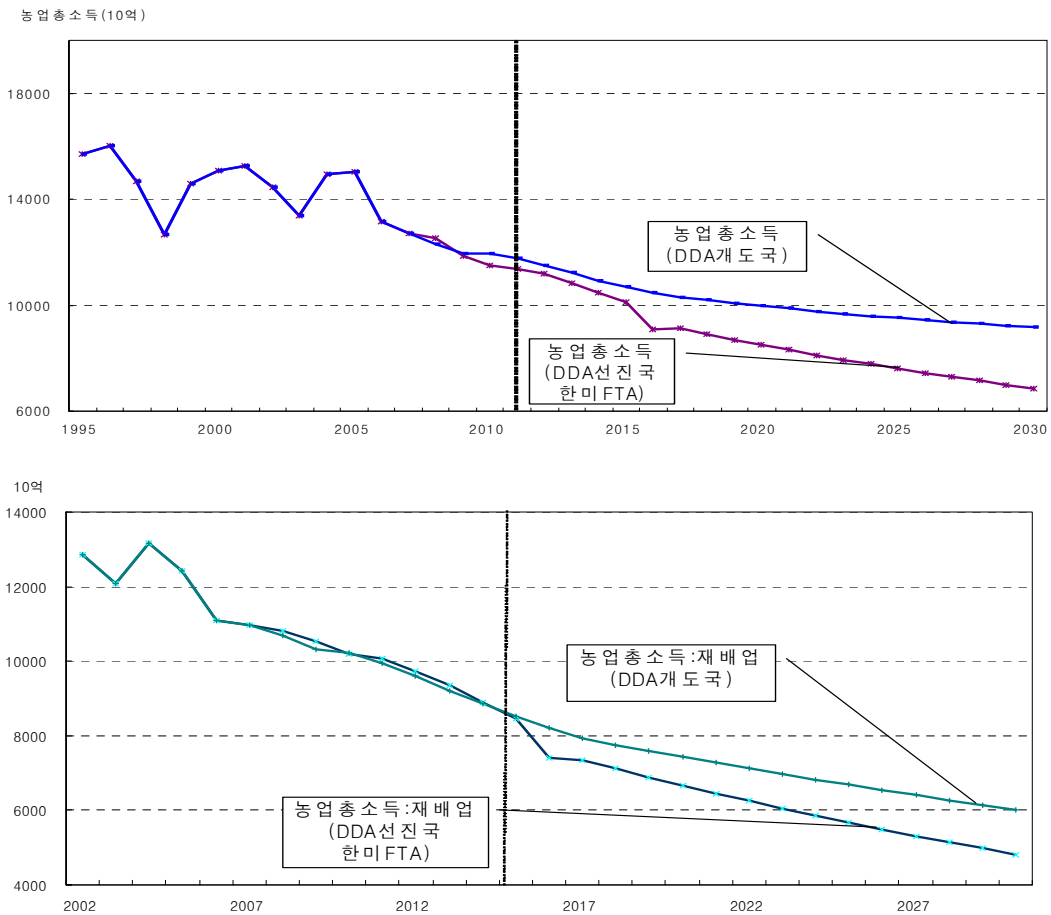
단위: 10억, 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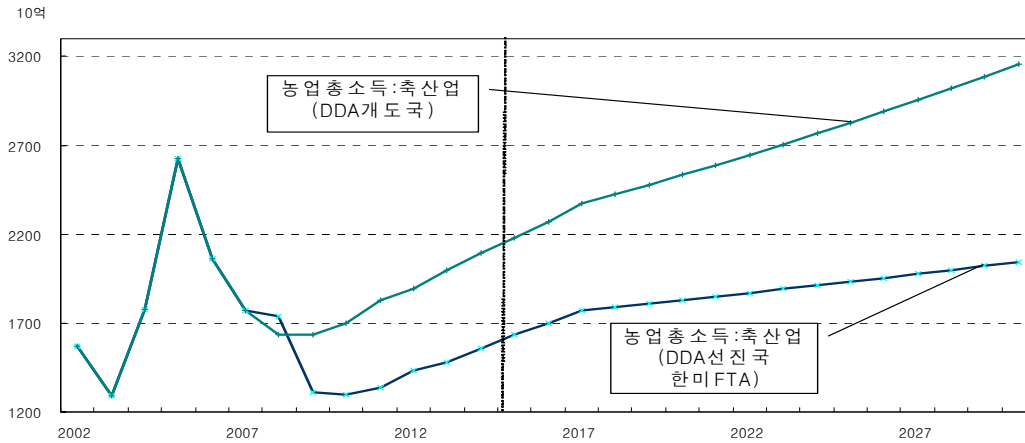
		농업총소득	재배업	축산
1995		15,714	13,756	1,958
2000		15,076	13,315	1,761
2005		15,041	12,418	2,623
DDA 개도국	2010	11,936	10,237	1,700
	2015	10,699	8,522	2,177
	2020	9,970	7,437	2,534
	2030	9,170	6,015	3,156
변화율	2000-2010	-2.3	-2.6	-0.4
	2010-2020	-1.8	-3.1	4.1
	2020-2030	-0.8	-2.1	2.2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11,484	10,185	1,299
	2015	10,093	8,460	1,633
	2020	8,498	6,670	1,828
	2030	6,862	4,818	2,044
변화율	2000-2010	-2.7	-2.6	-3.0
	2010-2020	-3.0	-4.1	3.5
	2020-2030	-2.1	-3.2	1.1

- 재배업부문 소득은 대부분 품목들의 재배면적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6조 1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와 달리 축산업부문 소득은 한육우와 양돈, 양계 부

문 성장으로 2005년 2조 6,230억원 수준보다 20% 더 성장한 3조 156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이 보다 1조 1120억원 감소한 약 2조 440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그림 3-5. 농업총소득 전망





2.5. 농가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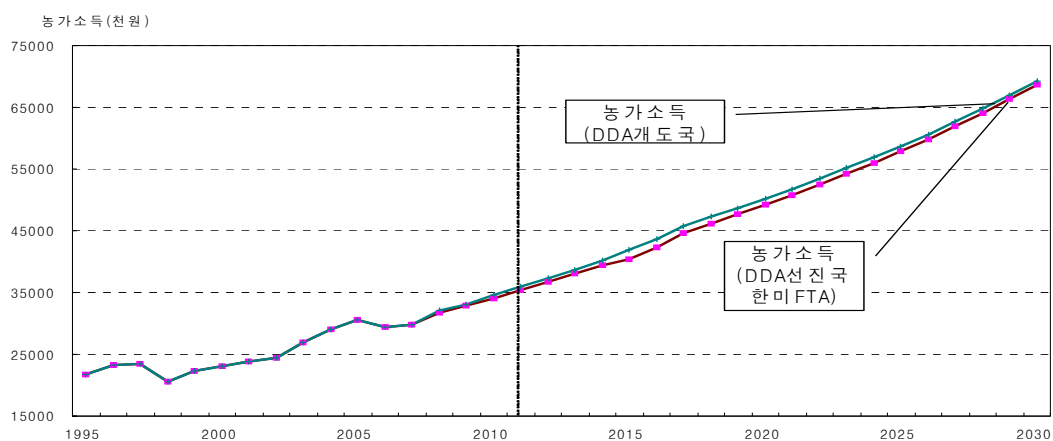
- 영농활동에 의한 농업부문 소득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투융자계획에 따른 직불금 증가 및 농가호수의 감소추이가 지속될 경우, 농가소득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30년에 6,92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 대우와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부문 위축이 예상되나, 농가호수 감소와 직불금 추가투입으로 2030년 농가소득은 개도국의 경우보다 0.8% 감소된 수준인 6,868만원 수준으로 전망됨.
- 호당 농업소득은 재배면적 감소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감소요인이 있으나, 농가호수의 감소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 1,182만원 보다 24% 증가한 2030년 1,469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호당 이전수입은 2005년 880만원에서 203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2,78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전수입 비중도 2005년 28.9%에서 2030년에는 40.2%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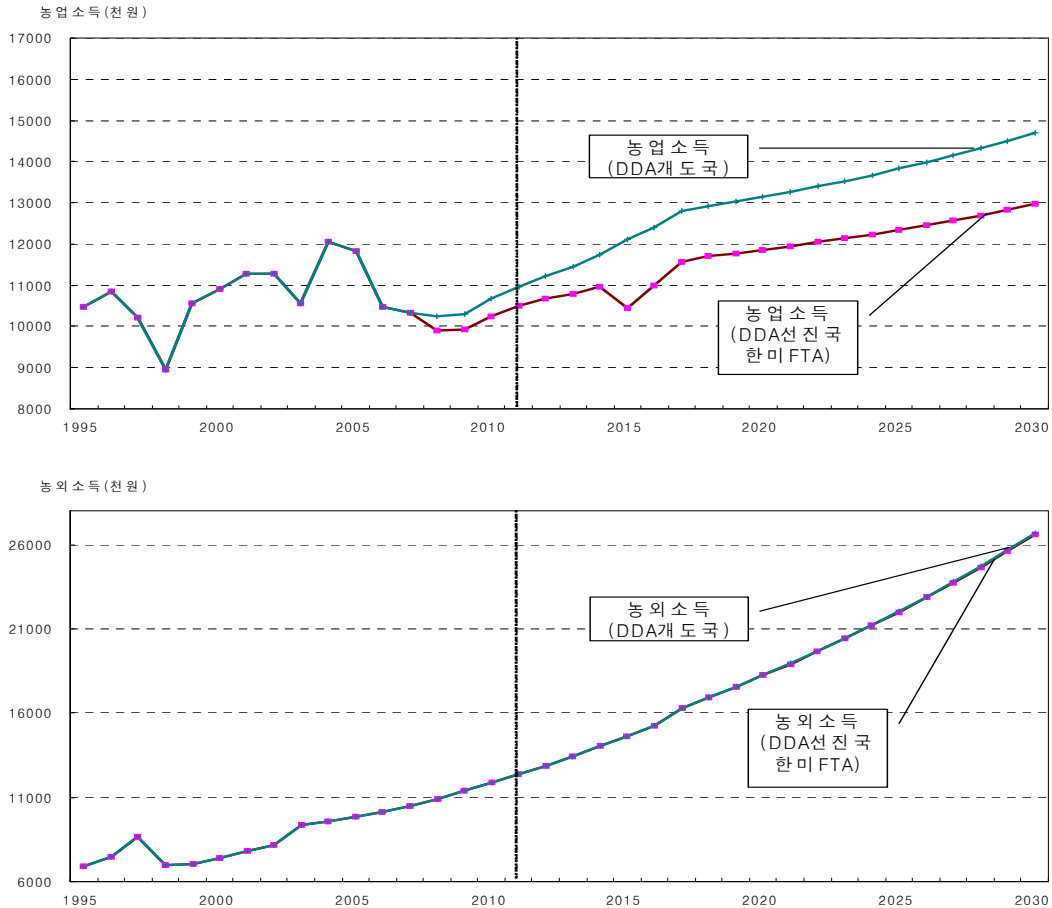
표 3-8. 농가소득 전망

단위: 만원(명목)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1995		2,180	1,047	693	440
2000		2,307	1,090	743	474
2005		3,050	1,182	988	880
DDA 개도국	2010	3,453	1,067	1,187	1,199
	2015	4,195	1,212	1,464	1,519
	2020	5,019	1,314	1,825	1,880
	2030	6,920	1,469	2,668	2,783
변화율	2000-2010	4.1	-0.2	4.8	9.7
	2010-2020	3.8	2.1	4.4	4.6
	2020-2030	3.3	1.1	3.9	4.0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3,413	1,026	1,187	1,200
	2015	4,034	1,046	1,464	1,524
	2020	4,918	1,186	1,823	1,909
	2030	6,868	1,297	2,663	2,908
변화율	2000-2010	4.0	-0.6	4.8	9.7
	2010-2020	3.7	1.5	4.4	4.8
	2020-2030	3.4	0.9	3.9	4.3

그림 3-6. 농가소득 전망





2.6. 농업생산액 변화

- 농업생산액은 축산업 부문 생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업 부문에서 쌀 재배면적과 가격하락,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와 포도, 배, 감귤, 복숭아 등 과실류의 재배면적과 가격하락에 의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 2005년 수준보다 약 12.7% 감소한 30조 6,46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보다 약 4조가 더 감소한 약 26조 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재배업 부문 생산액은 개도국 대우 적용의 경우, 연평균 1.7~1.9% 감소하여 2030년 14조 9,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선진국과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평균 감소율이 개도국 대우 적용시 보다 1.4% 포인트 더 감소하여 2030년에 12조 1,94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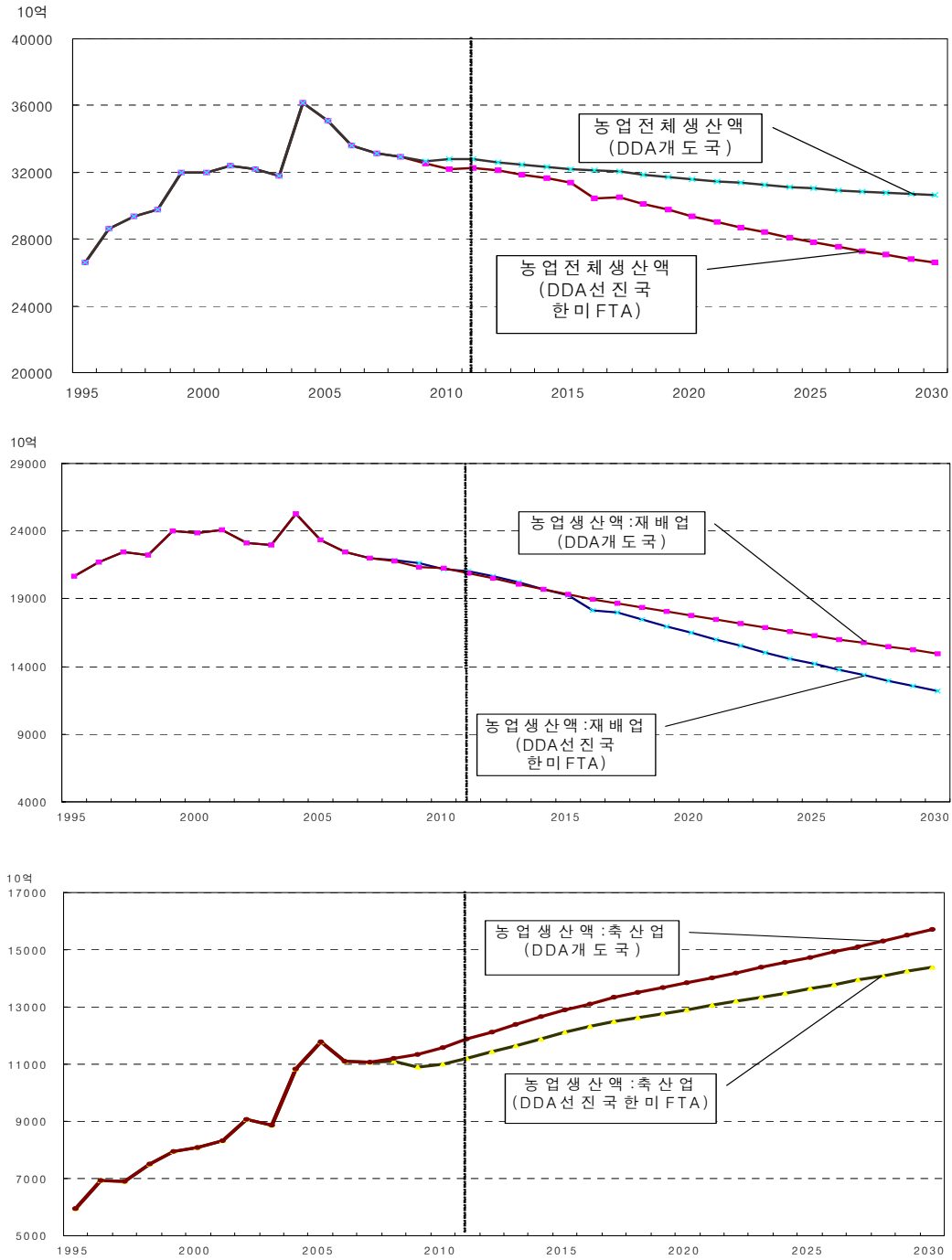
표 3-9. 농업생산액 전망

단위: 10억

		농업생산액	재배업	축산업
1995		26,602	20,639	5,961
2000		31,968	23,885	8,082
2005		35,089	23,322	11,767
DDA 개도국	2010	32,810	21,229	11,581
	2015	32,213	19,323	12,889
	2020	31,596	17,747	13,849
	2030	30,646	14,950	15,696
변화율	2000-2010	0.3	-1.2	3.7
	2010-2020	-0.4	-1.8	1.8
	2020-2030	-0.3	-1.7	1.3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32,193	21,187	11,007
	2015	31,351	19,227	12,123
	2020	29,377	16,465	12,912
	2030	26,599	12,194	14,405
변화율	2000-2010	0.1	-1.2	3.1
	2010-2020	-0.9	-2.5	1.6
	2020-2030	-1.0	-3.0	1.1

- 축산업 부문 생산액은 한육우, 양돈, 양계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어 2005년 11조 7,670억원에서 2030년 15조 6,960억원까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과 한미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관세감축폭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생산 부문 위축으로 개도국 대우 적용시 보다 1조 2,910억원 감소한 14조 4,050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그림 3-7. 농업생산액 전망



2.7. 농업 GDP 변화

- 농업부문 부가가치(2000년 기준)는 한육우, 양돈, 양계부문 등 축산부문 성장이 기대되나. 재배업부문에서 대부분 품목들의 재배면적 감소와 추가적인 관세감축폭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2005년 21조 5,550억원 수준에서 2030년 17조 6,740억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재배업부문 부가가치는 대부분 품목에서 재배면적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년에 14조 2,3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과 한미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보다 약 6% 더 감소한 13조 3,910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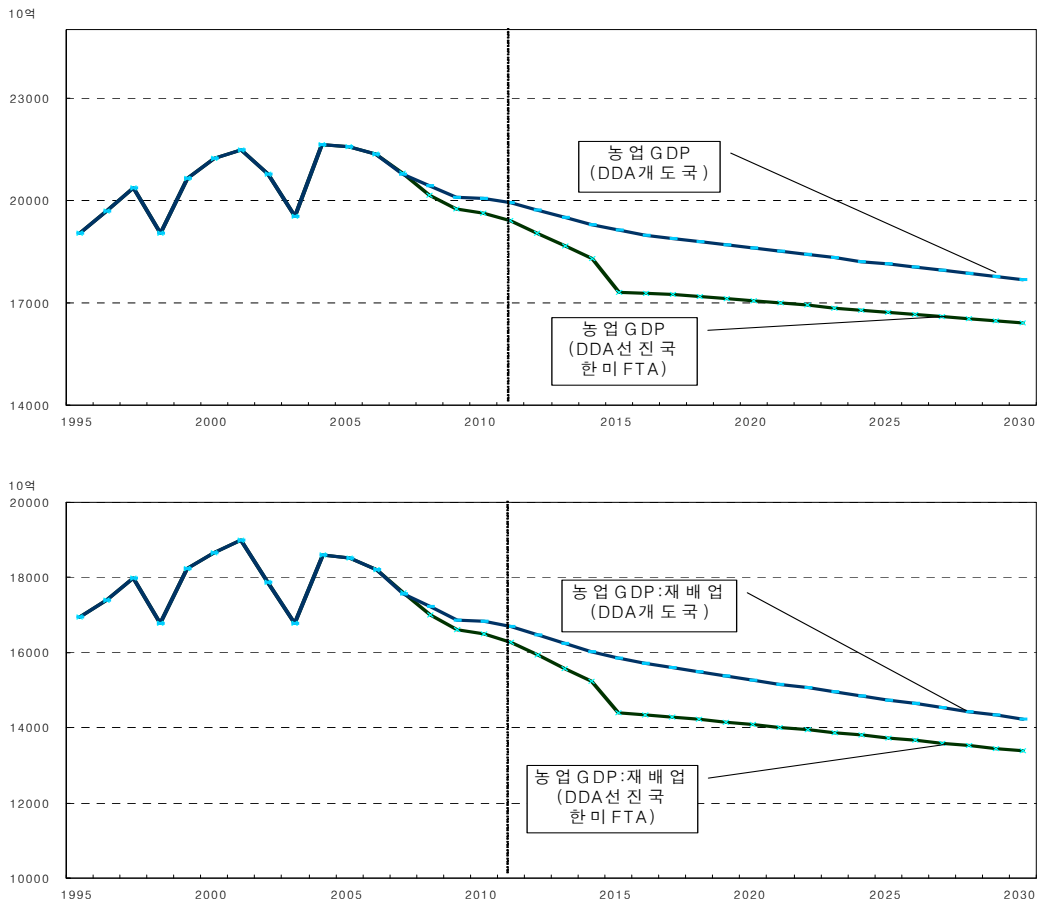
표 3-10. 농업부문 GDP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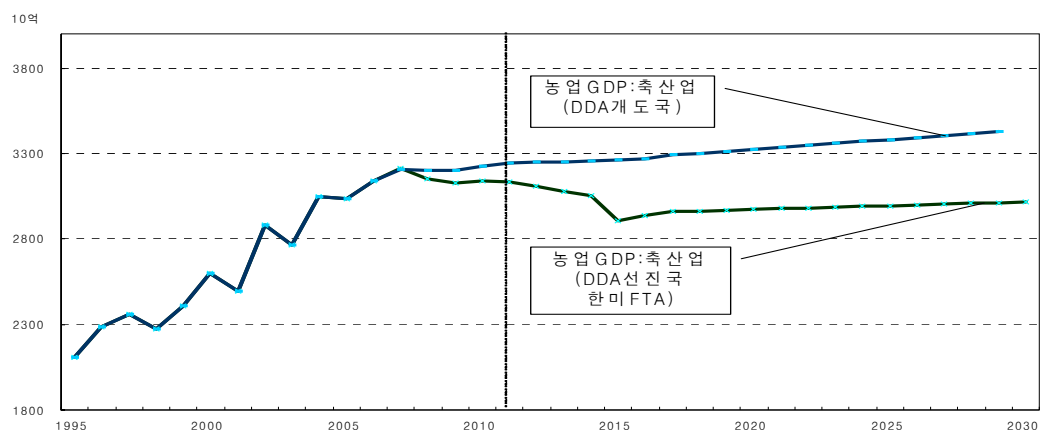
단위: 10억, 2000년 기준가격

		농업GDP	재배업	축산업
1995		19,051	16,945	2,106
2000		21,244	18,646	2,598
2005		21,555	18,520	3,036
DDA 개도국	2010	20,065	16,838	3,227
	2015	19,127	15,865	3,262
	2020	18,595	15,270	3,325
	2030	17,674	14,235	3,440
변화율	2000-2010	-0.6	-1.0	2.2
	2010-2020	-0.8	-1.0	0.3
	2020-2030	-0.5	-0.7	0.3
DDA 선진국 한·미 FTA	2010	19,630	16,492	3,138
	2015	17,298	14,392	2,906
	2020	17,052	14,079	2,973
	2030	16,408	13,391	3,017
변화율	2000-2010	-0.8	-1.2	1.9
	2010-2020	-1.4	-1.6	-0.5
	2020-2030	-0.4	-0.5	0.1

- 축산업부문 부가가치는 개도국 대우 적용의 경우, 관세감축 폭이 적어 현재의 증가 추이를 이어 갈 것으로 기대되어, 2030년에 2005년보다 약 4천억원이 증가한 3조 4,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보다 관세감축 폭이 큰 선진국과 한미 FTA가 적용되는 경우는 2005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8. 농업부문 GDP 전망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 비관적 요소; 농업의 절대적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

- 총량분석의 주요지표 전망에 의하면 농업총생산액, 경지면적, 농가 호수 등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서 농업이라는 산업의 절대적인 규모가 축소되어가는 것을 의미함.
 -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산업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험한 사실이며,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있음.
- 농업총소득의 감소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 신호이기도 함.
 -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호당 또는 1인당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부문 GDP를 키워나가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

가고, 수확후 처리기술(post-harvest technology)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희망적 요소; 성장 부문 중심으로 농업구조 개편

- 농가 및 농가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소수정예화된 농업인력 및 경영구조로 개편될 수 있음.
 - 농업인구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소득이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령 경영주의 은퇴에 따라 젊은 후계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김.
 - 전업농들은 규모경제의 유리성을 발휘하여 유동화되는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을 집적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 중심의 생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음.

- 농업생산구조는 전통적인 일반경종 농업에서 축산과 시설원예 등의 성장작목 중심으로 조정되어 갈 것임.
 - 쌀은 목표가격 제도하에서 과잉을 초래할 정도로 생산이 유지될 것이나, 일반전작이나 노지채소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임.
 - 따라서 고소득 작목인 축산과 시설원예가 주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지만, 수익성이 하락하는 작목을 대체하기 위한 육종과 대체작목 개발이 중요한 과제임.

제 4 장

농업·농촌의 변화와 메가 트렌드

1.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 도시민들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식구조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는 도시민까지 확대하여 2007년 1월에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도시민 면접조사(담당: 리서치앤리서치):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광역도시 47.4%, 중소도시 52.6%)
 -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2.53\%$ 포인트
 - 농업인 우편조사(현지통신원 2천명 대상, 응답자 857명): 60세 이상 54.3%, 60세 미만 36.8%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88.4%, 농업인은 72.1%로 집계되어 농업인 보다 도시민이 농업을 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인)	비율(%)	빈도(인)	비율(%)
앞으로도 중요	1,221	81.4	516	60.2
앞으로는 중요	105	7.0	102	11.9
앞으로도 중요치 않아	49	3.3	87	10.2
앞으로는 덜 중요	125	8.3	143	16.7
모름/무응답	-	-	9	1.1
계	1,500	100.0	85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 농업·농촌의 역할로서 식량안정 공급을 중시

-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음.
-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인식은 현재가 미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

표 4-2. 현재 농업·농촌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인)	비율(%)	빈도(인)	비율(%)
식량의 안정적 공급	1,266	42.3	697	40.7
국토의 균형발전	727	24.3	299	17.4
자연환경 보전	327	10.9	464	27.1
전통문화의 계승	325	10.8	61	3.6
관광 및 휴식의 장소	217	7.2	63	3.7
전원생활의 공간	132	4.4	99	5.8
기타	2	0.1	4	0.2
모름/무응답	-	-	27	1.6
계	2,995	100.0	1,714	100.0

주: 2개씩 선택하도록 한 문항임.

표 4-3. 미래 농업·농촌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인식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인)	비율(%)	빈도(인)	비율(%)
식량의 안정적 공급	1,081	36.1	606	35.4
국토의 균형발전	684	22.8	282	16.5
자연환경 보전	411	13.7	438	25.6
전통문화의 계승	342	11.4	91	5.3
관광 및 휴식의 장소	241	8.0	110	6.4
전원생활의 공간	234	7.8	134	7.8
기타	2	0.1	6	0.4
모름/무응답	-	-	47	2.7
계	2,995	100.0	1,714	100.0

주: 2개씩 선택하도록 한 문항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 이와 같이 국민들이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식량수급 사정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스스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향후의 식량수급 전망에 대하여 도시민의 51%와 농업인의 72%가 식량수급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반면에 앞으로 식량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인식은 도시민이 11.6%, 농업인이 8.2%에 불과함.

표 4-4. 20년 후의 세계 식량수급 사정에 대한 전망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인)	비율(%)	빈도(인)	비율(%)
식량수급 사정이 어려워질 것임	768	51.2	617	72.0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558	37.2	145	16.9
식량수급 사정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임	174	11.6	70	8.2
모름/무응답	-	-	25	2.9
계	1,500	100.0	85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표 4-5.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인)	비율(%)	빈도(인)	비율(%)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892	59.5	587	68.5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	564	37.6	215	25.1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44	2.9	34	4.0
모름/무응답	-	-	21	2.5
합 계	1,500	100.0	85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기대

- 향후 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각 61.1%, 51.7%)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다음 순으로는 도시민은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자구책'(20.9%)을, 농업인은 '일반국민의 농업보호 의지와 동참'(31.0%)을 들어 부분적으로 견해 차이를 보임.

표 4-6. 우리 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한 조건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인)	비율(%)	빈도(인)	비율(%)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자구책	314	20.9	127	14.8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	917	61.1	443	51.7
일반국민의 농업보호 의지와 동참	264	17.6	266	31.0
기타	5	0.3	11	1.3
모름/무응답	-	-	10	1.2
계	1,500	100.0	85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 농업인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의향

- 농업인의 농촌 생활이나 영농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이 강함.

표 4-7. 농업인의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인)	비율(%)
매우 만족	10	1.2
약간 만족	131	15.3
그저 그렇다	348	40.6
약간 불만	272	31.7
매우 불만	87	10.1
무응답/모름	9	1.1
계	857	100.0

표 4-8. 농업인의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구 분	빈도(인)	비율(%)
매우 만족	31	3.6
약간 만족	151	17.6
그저 그렇다	347	40.5
약간 불만	241	28.1
매우 불만	80	9.3
무응답/모름	7	0.8
계	857	100.0

표 4-9. 농업인의 농촌 거주 의향

구 분	빈도(인)	비율(%)
계속 살겠다	697	81.3
떠날 생각이다	59	6.9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	10	1.2
모르겠다	86	10.0
무응답/모름	5	0.6
계	85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향

-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도시민이 응답자의 71.3%(‘매우 많다’ 21.7%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의향

구 분	빈도(인)	비율(%)
매우 많다	325	21.7
조금 있다	744	49.6
별로 없다	315	21.0
전혀 없다	116	7.7
합 계	15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61.9%),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17.7%) 순으로 꼽아 농촌 거주 이유가 경제적 조건보다 건강과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1.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

구 분	빈도	비율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23	2.2
농업을 경영하여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43	4.0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662	61.9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25	2.3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70	6.5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89	17.7
생활비가 도시보다 싸므로 여유있게 살 수 있어서	55	5.1
기타	2	0.2
계	10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7.1).

2.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2.1. 농업과 농정의 시대적 변화

□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농업국가였다고 할 정도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농업정책은 증산에 중점이 두어졌음.
 - 식량 증산을 위하여 최소가격지지 등과 같은 가격정책이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농업 생산의 비효율성 내지는 생산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특히 가격정책은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지적됨.
- 농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1970년대 유럽경제공동체(EC)를 중심으로 파악되기 시작함.
 - 예를 들어 구서독에서는 강력한 구조정책을 추진하여 1980년대 초까지 10년간 경지규모를 2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평가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구조정책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음.
 - 첫째, 기대한 만큼 대농경영이 육성되지 못하였고, 농지유동화를 통한 규모 확대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함.
 - 둘째, 이농 장려로 인하여 농업 인구가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자연이나 경관 및 국토 관리의 측면에서도 구조정책에 대한 회의가 표출됨.
 - 셋째, 농업 생산이 전문화와 단작화 및 대규모 영농을 통한 집약적 영농의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생태계 순환 체계의 붕괴 및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등장함.
 - 넷째, 영세소농의 소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함.

□ 효율주의 농업의 한계와 지역정책의 대두

-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 농정은 소위 '효율주의'의 대농경영 육성에서 전환하여 소농도 함께 지원하는 지역농정을 채택하게 됨.
 - 이러한 인식은 농업을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즉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임.
 -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생산 주체인 농업인과 생산의 공간인 농촌 지역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반영됨.
- 지역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폭넓게 인식되는 것이 이른바 '조건불리지역 특별대책'임.
 - 영국에서 시작된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Areas)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지역개발 정책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 1990년대 들어 세계 농정의 관심은 농업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국토 보전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 농업이 가진 본래의 자원보전적 기능이 농산물의 생산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전통적인 농업은 식량 부족이라는 상황 아래서 증산을 위한 집약화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침식 등을 일으켜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반성임.
- 농업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이 대두되고 있음.
 - 첫째는 과일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이며, 조방적 농

법 내지는 감산적 농법을 도입하여 생산량도 축소하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자는 것임.

- 둘째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배려임. 그 동안의 증산 기술은 생물·화학적인 기술진보로서 특히 농약의 사용량을 연쇄적으로 증가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되면서 식품 안전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음.
- 셋째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유실 등과 같은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임. 이러한 인식은 1984년 UN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제시됨으로써 더욱 고조됨.

표 4-12.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시기 및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성과
1960~70년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혁명과 가격지지를 바탕으로 식량증산을 도모 - 증산을 통한 소득문제 해결에는 근본적 한계 노출 ○ 1960년대를 전후로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공간 소득균형을 동시에 추구
1980~90년 효율성 위주의 농업 한계와 지역정책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지지와 수출보조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농산물 공급과잉은 UR 협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 생태계 순환체계의 붕괴, 환경오염 문제 노출 ○ 1980년대 초부터 조건불리지역 농업 유지에 관심 - 국토자원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1990~2000년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성, 농촌경관 등에 관심 증대 -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보호 농정에서 시장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 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로 접근

2.2.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 비중

- OECD국가들의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들의 농업 거시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의 GDP 비중을 보면, 농업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가 3.4%로 가장 높으며, 그밖의 국가는 대부분 1~2%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농가인구 비율은 대체로 2~3%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일랜드, 핀란드, 스위스 등은 농가 비중이 5% 이상으로 높음.

표 4-13. OECD 주요국의 농업 비중(2005년 기준)

	1인당GNI (\$) 2005년	국민 1인당 경지면적 (a) 2005년	노령화 지수 (%) 2005년	도시화율 (%) 2005년	GDP의 농림어업 비중 (%) 2004년	총인구의 농가인구 비율 (%) 2004년	취업자의 농업종사 자 비율 (%) 2004년
한국	16,291	3.8	47.4	80.8	3.8	7.1	11.2
일본	36,431	3.7	140.9	65.8	1.3	3.0	3.4
캐나다	34,371	161.5	74.6	80.1	-	2.2	2.2
미국	41,802	58.9	59.3	80.8	1.2	2.0	2.0
오스트리아	36,967	17.9	107.8	66	1.9	4.3	4.3
덴마크	47,720	41.9	79.8	85.6	2.3	3.2	3.4
핀란드	36,761	42.3	91.8	61.1	3.2	5.0	4.9
프랑스	35,338	32.4	91.4	76.7	2.5	2.8	-
독일	33,861	14.6	131.3	75.2	1.1	2.1	2.4
아일랜드	40,667	28.5	54.1	60.5	-	8.7	8.3
이탈리아	30,244	18.4	142.4	67.6	2.6	4.3	-
네덜란드	25,332*	5.8	77.5	80.2	2.4	3.0	-
노르웨이	63,423	18.9	76.7	77.4	1.6	4.5	4.2
스웨덴	39,463	29.6	-	84.2	1.8	3.1	3.1
스위스	53,688*	6.0	96.7	75.2	-	5.8	3.6
영국	37,651	9.6	89	89.7	1.0	1.7	1.8
호주	33,797	237.8	64.7	88.2	3.4	4.3	4.5

주: 1인당 GNI 3만\$ 이상 국가. 네덜란드 GNI는 2002년, 스위스는 2004년 수치임.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3. 농업·농촌의 역할과 비전에 관한 외국사례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The Future of Services in Rural England - a Scenario for 2015, 2005*

- 향후 10년 간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변화를 예측함. 특히 농촌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범위 수준의 변화 요인(Driver)과 예상되는 결과를 가설화하였음. 즉,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변화 요인들을 농촌지역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들로 구분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추세에 기초하여 미래의 농촌지역의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함.
- 농촌지역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 수요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문화적 변화, 농촌 가구의 가처분 소득, 개인 이동성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대, 정부 정책, 가정에 기초한 농촌 비즈니스 사업체의 서비스 수요,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서비스 수요 등임.
 - 공급 측면에서는 인구 증가,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른 농촌 가구수 증가, 통근 근로자의 증가, 지역 밖으로의 통근자 비율 증가, 가치관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 자동차 문화, '농업인에서' '농촌 기업가'로의 변화 등임.

□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Agenda for Living Countryside - Responding to change, 2004*

- 네덜란드 농촌에 대한 2013년까지의 비전과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함. 네덜란드 '국가 공간 계획 정책(National Spatial Planning Policy)'의 틀 안에서 농촌에 대한 중기(2013년까지) 비전, 주요 정책

의제, 목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이 작업에는 농업·자연·식품 품질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교통·공공사업·수자원관리부, 내무성, 보건·복지·체육부, 사회·고용부, 재무부, 국방부 등 네덜란드 중앙 정부부처 대부분이 참여하였음.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 농촌지역의 기능과 그 의미를 상기시키고, 주요 정책과제로서 농촌경제의 변화 전망과 과제,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전망과 과제, 농촌지역의 자연 및 경관에 관련된 전망과 과제 등을 제시함. 농촌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EU 공동농업정책의 틀 안에서 네덜란드 농촌 정책의 변화까지도 검토함.

□ 일본 총리실, 2030 국가 비전, 2005

- 2030년의 바람직한 국토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작성함.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지방중소도시가 쇠퇴하고, 지역사회의 유지가 곤란한 지역이 확대되며, 산림과 농지가 황폐화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를 지적함. 또한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가 급속하게 부상하여 일본이 21세기에 도 경제사회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점을 적시함.
- 농정에 대해서는 환경과 농업이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함. 2030년 경에 일본인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여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시간을 중시하며, 인구는 도시에만 몰려 사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분산하여 거주하고, 분산 거주는 핵심은 적정 규모의 소도읍과 그 주변에 펼쳐지는 풍요롭고 활기찬 농산촌이라는 점을 강조함.
 - 식량자급율은 약 70%에 달하고, 농지와 산림은 농업이나 임업 생

산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면적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일본은 여전히 공업국이지만 환경기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환경과 농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를 유지하며 자원 면에서도 자립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농업대학교, **Dare to Dream - VISION of 2050 Agriculture in China, 2004**

- 중국 농업비전 2050 작성을 위한 작업에 50명 이상의 학자, 기업가, 농민, 학생, 교사,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근로자들이 참여하였음.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로는 도농간 및 동서간 불균형, 중국 서부지역 개발,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기술혁신, 인구-자원의 균형, 제한요소로서의 수자원, 무역과 농식품 등임.
- 세계가 향후 50년 동안 직면할 대표적인 이슈로는 식량,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모두 농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2위(2002년)였으나, 향후 2023년에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국의 1인당 GDP는 2050년에 현재의 일본 수준을 달성할 것임. 중국이 핵심적인 사회 이슈와 농업정책, 교육인프라, 과학기술, 그리고 자연자원 보전 등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다면 이들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2050년까지 중국의 인구가 16억명 수준까지 증가한다면, 식량, 사료, 그리고 섬유에 대한 수요는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것이지만, 반면 경지면적은 1/5 가량이 줄어들 것임. 중국은 현재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은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의 신활력소로서 농업의 증진을 요구하고 있음.

3. 농업·농촌의 미래 모습과 메가 트렌드

3.1. 선행연구에 의한 한국 농업의 미래 모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경제의 갈등과 새 도전』, 198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87년 2월에 “21세기 농정기획반”을 구성하여 2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쳐 1989년 5월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함.
 -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농정을 지배해 온 증산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로운 물결인 민주와 지방화, 정보화, 시장경제화와 국제적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기 위함.
- 21세기의 농림수산경제를 보는 시각은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한 식량증산과 공급의 역할이란 차원에서 보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경영적 또는 국토자원관리적 시각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을 제안함.
 - 공공재인 농지, 산, 바다의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생태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환경산업
 - 항구적인 국민 식품의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국가 전략산업
 - 지방화 시대의 농산어촌을 인간 정주의 지역사회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간이 되는 지역 기초산업
 - 일정한 규모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가소득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산업

□ 21세기위원회, 『미래 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1992

- 1989년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된 21세기 위원회가 3년간 세미나와

공개토론회 등의 작업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함.

- 당시에 국가발전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정세에 대한 전망, 국제관계에서 주변 국가들의 전략 변화,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과학기술·국토자원·인력수급 등 하부구조 분야의 국가전략과 정책방향, 정치·사회·문화 등 상부구조 분야의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5개 주제로 나누어 전망함.
- 이 보고서의 제3부 '2020년 한국사회의 모습'의 내용 안에 '농업이 다원화되고 농촌은 전원생활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모습을 전망함.

<농업·농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업 지원의 감소
-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 환경문제의 대두
- 첨단기술의 발달
- 지방화와 민주화의 진전
- 농촌 정주환경의 변화
- 남북통일의 가능성

<미래 농업·농촌의 모습>

- 농촌의 식량공급 기능은 국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는 식량안보 기능으로 변화할 것임.
- 농촌의 고용유지 기능도 그 역할이 축소 조정되어 농촌 중고령자의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보호 기능이나 지역사회 유지 기능으로 바뀔 것임.
-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부문 비중과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도 크게 줄어들 것임.
- 농촌경제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가진 모든 부

존자원과 잠재력을 다양하게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소득원의 다원화가 추진될 것임.

- 농업활동은 전문화되고 농촌인구는 안정될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1999

- 새천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경제사회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도록 경제차관회의('99.8.3)에서 결정하여 각 부문별로 작업에 착수함.
 - 농림부문 작업을 위해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과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공동반장으로 하여, 농림부 공무원, 학계, KDI, KREI, 생산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실무위원회 구성('99.8.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총 6차례의 실무위원회 및 정책담당자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대전, 서울)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 기술·정보·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이면서 국토 자원·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생명·환경산업'으로 정착할 것임.
 - 농업에 생명공학·전자공학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어 식품안전성 확보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 기초식량 자급을 기초로 원예·축산은 수출산업으로 성장
- 농업인은 경영자로서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농업경영의 혁신을 주도할 것임.
 - 선도적인 가족전업농이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이끌어 감
 - 중소농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
- 농촌은 농업인과 타산업 종사자가 함께 거주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임.

- 기초시설이 정비되고 도시와의 접근성도 향상되어 쾌적한 전원생활 가능
- 전통문화가 보존된 공간으로서 국민 모두가 느끼는 마음의 고향으로 인식
-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은퇴 농업인 등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 담당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

- 2002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비전을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함.
-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1)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
 - 농수산물의 공급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식품의 안전성, 품질,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됨.
 - (2) 다양한 경영체가 담당하는 산업
 - 규모와 형태가 각기 다른 다양한 경영체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존하지만, 전업경영체가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됨.
 - (3) 환경을 보전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어업·농어촌
 - 환경을 보호하는 농수산업,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보전되는 농어촌으로 변모함.
 - (4) 농어가 유형·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득안전망 확충
 - 다양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 등이 마련되어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중소 농어의 농외취업기반 조성, 노령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으로 안정된 생활기반이 마련됨.

(5) 더불어 사는 열린 농어촌 공간

- 농수산업자와 타산업 종사자, 은퇴인구 등이 서로 보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함.
- 도농교류와 자연친화적 관광을 통해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양 공간으로 활용됨.

(6) 복지제도가 갖추어진 쾌적한 생활 공간

- 농어촌의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환경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쾌적한 산업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변모함.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함.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도시민 지향의 농어업으로 전환
- 농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
- 농어업의 경쟁력은 생산의 효율성, 품질 고급화, 마케팅의 혁신으로 모색함.
- 생산 중심에서 환경·지역·복지 중심으로 전환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2004

- 농림부는 2004년 2월에 DDA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10년 간의 농정 로드맵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여기서 제시된 2013년 농업·농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1) 농업 :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

-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고품질·경쟁력 우수 품목의 수출시장 확대
 - 쌀 전업농/생산비중 : ('02) 41천호/22% → ('13) 70/50
 - 축산전업농/사육비중 : ('02) 13천호/65% → ('13) 20/85

- * 원예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발전
-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완화되어 농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
 - 농업 GDP대비 쌀 비중 : ('02) 33% → ('08) 30 → ('13) 25

(2) 농업인: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 실현

- 농가소득 구조를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
 - 1인당 도·농간 소득 비교 : ('02) 90% → ('08) 104 → ('13) 105
 - ('02→'13) : 농업소득 46% → 33, 농외소득 33 → 40, 이전수입 21 → 27
 - * 농외소득 비중('01) : 미국 91%, 일본 87%, 한국 54%

(3) 농 촌 :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하여 농촌인구 20% 수준 유지
 - 농촌인구 비중 : ('80) 42.7% → ('02) 20 → ('08) 18 → ('13) 17 (현 추세 유지)

3.2. 농업·농촌의 미래 모습과 메가 트렌드

□ 메가 트렌드는 농업·농촌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큰 흐름

- 메가 트렌드란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의 1982년 저서 “메가 트렌드(Megatrends: The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에서 유래한 용어임.
 - 저자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조류로서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을 지적함.
- 메가 트렌드란 주체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적 노력에 의해 형성되거나 경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불가피하게 당면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이나 개별 조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근본적인 조류나 흐름으로 해석됨.

□ 산업사회 단계와 농업의 변화 흐름

-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 이어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농업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농업기술이 변화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농경사회: 자급자족(먹을거리), 자연의 지배, 증산을 위한 생물학적·화학적 기술
 - 산업사회(탈농경사회): 시장화(값싼 상품), 자연의 정복과 약탈, 이윤추구를 위한 화학적·기계적 기술
 - 후기산업사회(탈산업사회): 탈시장화(좋은 식품), 자연과의 조화, 안전한 식품을 위한 생물학적 기술

표 4-14. 산업사회 단계와 농업의 변화

농경사회	산업사회 (탈농경사회)	후기산업사회 (탈산업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급자족(먹을거리) - 생산, 소비일치 - 단순교환, 생계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화(값싼 상품) - 상업적 이윤추구 - 시장경쟁, 판매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장화(좋은 식품) -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확대 - 틈새시장, 지역시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지배 - 자연이용 - 자연재해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정복, 약탈 - 토지 약탈 - 생태계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의 조화 - 자연재해의 관리 - 파괴된 생태계질서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산을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기술 - 생계형 다품목 소량생산 - 분산화, 다양화 - 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추구를 위한 화학적·기계적 기술 - 대량생산의 단작화 - 규모화, 전문화 - 규격화,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식품을 위한 생물학적 기술 - 고품질 다품목 소량생산 - 유기적 통합화, 시스템화 - 탈규모화, 차별화

최양부, “한국농업의 21세기 패러다임”(1995년 강연자료)에서 재정리.

□ 농업·농촌의 메가 트렌드와 농촌공간의 변화 흐름

- 박시현(2007)은 농업·농촌의 커다란 변화 추세인 메가 트렌드를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고도 정보화 시대, 교통 발달, 도시화 진전, 웰빙형 소비생활 확산 등의 6개 분야로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가 농촌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세계화: 시장개방 진전으로 인해 농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폭 넓게 이루어질 것임.
 - 저출산·고령화: 농업생산력의 성장이 둔화되고 농촌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임.
 - 고도 정보화 시대의 도래: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되는 반면, 농촌지역의 정보화 격차가 확대될 것임.
 - 교통의 발달: 도시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되고, 농촌지역은 전원주거 지로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 도시화의 진전: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것임.
 -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생활 확산: 친환경농업과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할 것임.

표 4-15. 농업·농촌의 메가 트렌드 요약

메가 트렌드	핵심 요소	농촌공간에 미치는 영향
1) 세계화	* FTA의 진행 * 중국의 경제 성장 * 동북아 블록 경제 태동	* 농업의 광범위한 구조 조정 * 영농 조건의 변화 * 농촌 구성원의 변화
2) 저출산· 고령화	* 경제성장 둔화 * 인구증가율 둔화 *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령친화산업의 발달 * 세대간 갈등 심화 * 전통산업의 축소	* 농업생산력의 증가 추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 경제 위축 * 외국인의 유입 증가 * 고령친화 농업의 부상 * 농촌주민들의 복지 수요 급증
3) 고도 정보화 시대 도래	* 기술의 가속화, 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	* 지역공동체의 약화 * 사이버공동체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멀티미디어화, 개인화, 이동화, 보안화 *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 사이버레이션 등 새로운 인간 관계 형성 * 고용구조의 불균형 심화 및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불평등의 확대 * 정밀농업의 발전 * 농산물 유통체계의 획기적 발전 * 농촌관광의 활성화 * 농촌복지 수준의 향상
4) 교통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의 비약적 확대 및 만나질 생활권 형성 * 광역 교통체계 구축 및 도로 외관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형성 * 고차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 각종 물류비용의 절감 및 농산물 시장 접근비용 감소 * 여가공간,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매력 증대
5) 도시화의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시의 외연적 확산 * 신도시의 조성 (정책적 조성 포함) * 농촌의 기능적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농지, 임야 등 토지의 감소 * 도농 경계의 불분명 * 도농 경계 지역, 읍면 소재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형 마을 형성
6)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생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 증대 *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광 경영체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분화 * 농업과 농업관광을 병행하는 겸업농 증가 * 농촌지역에서의 관광 관련 신규 고용 창출 *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 개발활동 활성화 * 귀농, 귀촌 인구 증가 * 경관을 고려한 주거단지 형성 * 친환경농업의 확대 * 지역별 순환농업체계 구축

자료: 박시현 외, 『농촌공간 2020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제 5 장

농업부문 2030 비전과 목표 설정

1. 농업·농촌의 미래상

- 농림업은 기초식량 공급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산업으로 발전
 - 쌀 자급을 기초로 원예와 축산은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으로 정착되어 국제 경쟁력을 실현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임.
 - 2030년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3kg, 논벼 재배면적은 70만ha 정도로서, 쌀 생산은 해외원조의 여력이 있는 수준이 될 것임.
 - 신선채소와 화훼 등의 시설원예, 사과와 배 등의 과일, 돼지와 닭 등의 축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유럽 수준의 경쟁력을 실현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임.
 -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식품산업으로서,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과 신유통·신물류 체계가 확립될 것임.
 - 신선식자재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국내농업과 식품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생력 있는

농식품산업으로 발전할 것임.

- 소비가 증가하는 채소, 과일, 육류 등의 국내 공급력이 증가하고, 유통경로 다양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업이 실현될 것임.

○ 농업이 첨단기술·자본·정보가 집약된 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전후방 산업을 능률적으로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복합산업을 실현할 것임.

- 유전공학, 전자통신기술 등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됨으로써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임.
- 1차 생산의 비중은 감소하지만(2030년 3% 수준),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산업을 포함한 농림업 비중은 10% 이상을 유지함.

○ 농림업은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 절감, 오염원 축소 등을 통해 환경산업으로 성장할 것임.

- 작물양분·병해충 종합관리(IPNM)를 통해 한국형 정밀농업 (precision farming)이 정착되고, 경종농업과 축산이 연계된 친환경 축산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 **농업인은 기업가정신과 전문적 기술·경영능력을 갖추고 타부문과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견실한 경영인으로 성장**

○ 20만명 정도의 중견 농업인이 지역농업 지도자로 성장하며, 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의 2/3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전문농업인은 자영업자 수준의 소득 및 생활수준을 실현하고, 전문경영의 계열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준의 경영선진화를 실현함.
- 농업법인과 농기업체가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개별농가의 경영을 보완하여 농산물의 수확후처리(저장·가공)를 담당함.

○ 일반 농업인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형태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시

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중농층은 소량 다품목의 고품질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에 참여하면서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함.
-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분석, 관광농업, 도농교류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여 농업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고령농업인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혜받게 되고, 농지임대소득 등을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인 현금 수입이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임.

□ 농촌은 농업생산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산업공간 및 전통과 문화가 보전되는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정착

- 2030년까지 농촌에는 전국민의 15% 이상이 거주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농촌주민의 정주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 농촌지역은 2020년 경부터 현재의 지방 중소도시 수준으로 생활기초시설이 정비되고 교통·통신 등 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도시민에게도 쾌적한 전원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수준이 도시 수준으로 정비될 것임.
- 농촌은 다양한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인 동시에 국민의 거주공간 및 여가·휴식·생태공간으로 변모하고, 전통문화가 보존되는 공간으로서 국민의 정신적 고향으로 인식될 것임.
 - 농공단지·농산물 가공공장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촌관광(2030년 국내관광의 45% 점유)은 지역산업으로 발전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임.
 - 도농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농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농촌지역은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삶의 공간으로서 더욱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로 발전할 것임.

2. 농업인력과 경영체의 비전

□ 추세 전망

-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연평균 3~4% 속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2015년까지 감소 속도가 빠르다가 그 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가 호수 : ('05) 1,273천호 → ('10) 1,118 → ('20) 759 → ('30) 624
 - 농가 인구 : ('05) 3,434천명 → ('10) 2,941 → ('20) 1,890 → ('30) 1,458
 - 농림업 취업자 : ('05) 1,747천명 → ('10) 1,524 → ('20) 967 → ('30) 705
 - * 단, KREI-ASMO 개도국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 이하 동일

-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농가인구 비율은 2030년에 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전체인구: ('05) 7.1% → ('10) 6.0 → ('20) 3.8 → ('30) 3.0
 - *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0년 4,93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표 5-1. 농촌인구와 농가인구 전망

단위: 천명, %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전국인구(A)*	48,138	48,875	49,277	49,326	48,635
농촌인구(B)	8,704	7,984	7,244	6,497	5,050
농가인구(C)	3,434	2,941	2,284	1,890	1,458
농촌인구 비율(B/A)	18.1	16.3	14.7	13.2	10.4
농가인구 비율(C/A)	7.1	6.0	4.6	3.8	3.0
농가/농촌인구비율(C/B)	39.4	36.8	31.5	29.1	28.9

주: 전국인구는 통계청 추계.

농촌인구와 농가인구는 본연구의 추정치.

-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의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 ('05) 29.1% → ('10) 34.0 → ('20) 42.5 → ('30) 53.4
 - 50대 이하 경영주 비율 : ('05) 41.7% → ('10) 36.7 → ('20) 24.9 → ('30) 15.0
 -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 ('05) 43.2% → ('10) 46.5 → ('20) 55.2 → ('30) 64.6
 - 2005년 농업총조사의 영농후계자 보유농가 비율은 3.6%에 불과

- 농가는 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되어가는 추세임.
 - 논 3ha 이상 농가의 경영면적 비율 : ('05) 26.4% → ('10) 31.6 → ('20) 42.1 → ('30) 49.4
 - 밭 2ha 이상 농가의 경영면적 비율 : ('05) 29.9% → ('10) 35.9 → ('20) 46.9 → ('30) 55.3
 - 시설 2천평 이상 농가의 경영면적 비율 : ('05) 52.9% → ('10) 54.3 → ('20) 58.3 → ('30) 61.7
 - 한우 30두 이상 농가의 사육두수 비율 : ('05) 46.9% → ('10) 54.4 → ('20) 60.3 → ('30) 62.6
 - 젖소 50두 이상 농가의 사육두수 비율 : ('05) 71.6% → ('10) 82.9 → ('20) 95.3 → ('30) 97.8
 - 돼지 1천두 이상 농가의 사육두수 비율 : ('05) 77.9% → ('10) 82.5 → ('20) 91.9 → ('30) 96.2

□ 비전과 목표 설정

- 농업인력과 경영체의 추세 전망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목표년도 2013년, 부록 참조)를 감안하여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표 5-2. 농업인력·경영체의 비전과 목표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농가인구 (만명)	343	290	210	150
- 총인구 비율 (%)	7.1	6	4	3
농가호수 (만호)	127	110	80	60
- 50대이하 청장년 경영주 비율(%)	42	38	30	20
쌀 전업농 생산 비중 (%)	27	35	46	60
한우 전업농 생산 비중 (%)	47	55	70	85
농업법인 (개소)	5,626	6,100	7,000	8,000

- 농가인구 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총인구의 3% 수준에 수렴할 것임.
 - 2030년 추세치(3%)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망
- 농가호수는 대략 60만호 정도를 유지하고, 그 중 기간적 전업농이 20만호 정도를 점유할 것임.
 - 경영이양 지원의 확대로 고령농가의 은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총농가 수는 추세치(624천호)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기간적 전업농 중에는 대규모 전업농 15만호와 중규모 농가(친환경 농업+농촌관광) 5만호 정도로 구성될 전망
- 농업생산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전체적으로 전업농의 생산 비중이 2/3 이상을 점유할 것임.
 - 쌀 생산은 자급적 농가(겸업농, 고령농)의 비중이 크므로, 전업농의 생산 비중은 60% 정도로 전망
 - 시설원예와 축산은 대규모 전업농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을 점유
- 청장년 전업농 및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중심 세력을 형성할 것임.
 - 전업농의 농업경영을 보완하여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저장·가공)를 담당하는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3. 농업생산의 비전

□ 추세 전망

- 경지면적 및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 내외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지면적 : ('05) 1,824천ha → ('10) 1,745 → ('20) 1,558 → ('30) 1,411
 - 벼 재배면적 : ('05) 980천ha → ('10) 905 → ('20) 818 → ('30) 741
 - 채소 재배면적 : ('05) 343천ha → ('10) 310 → ('20) 290 → ('30) 275
 - 과일 재배면적 : ('05) 150천ha → ('10) 140 → ('20) 123 → ('30) 107
 - * 단, KREI-ASMO 개도국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 이하 동일

- 경종작물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에 원예작물(특히 과채류, 화훼류 등의 시설원예) 및 축산물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며, 2030년에는 축산물 생산액이 경종작물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총생산액 : ('05) 35.1조원 → ('10) 32.8 → ('20) 31.6 → ('30) 30.6
 - 경종생산액 : ('05) 23.3조원 → ('10) 21.2 → ('20) 17.7 → ('30) 15.0
 - 축산생산액 : ('05) 11.8조원 → ('10) 11.6 → ('20) 13.8 → ('30) 15.7

- 영농형태별 농가를 보면, 논벼 농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원예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고령농업인들도 위탁영농 형태로 농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총농가의 50% 정도가 논벼에 종사하는 추세로 전망
 - * 노후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
 - 채소농가와 과수농가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에 기타 경종작물 농가의 비중은 감소 추세
 - 채소농가 비중 : ('05) 18.1% → ('10) 18.8 → ('20) 19.5 → ('30) 20.8
 - 과수농가 비중 : ('05) 11.4% → ('10) 12.3 → ('20) 15.0 → ('30) 16.3
 - 축산농가 비중 : ('05) 6.4% → ('10) 6.4 → ('20) 6.0 → ('30) 5.0

표 5-3. 영농형태별 농가수 전망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전체	1,273	100.0	1,118	100.0	759	100.0	624	100.0
논벼	648	50.9	568	50.8	386	50.7	314	50.3
채소	230	18.1	210	18.8	148	19.5	130	20.8
과수	145	11.4	138	12.3	114	15.0	102	16.3
특용작물	28	2.2	23	2.1	12	1.6	9	1.4
화훼	10	0.8	10	0.9	8	1.1	7	1.1
기타전작	126	9.9	97	8.6	44	5.8	30	4.8
축산	82	6.4	71	6.4	45	6.0	31	5.0
기타	3	0.2	3	0.3	1	0.2	0.8	0.1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에 의한 추정.

□ 비전과 목표

- 농업생산의 추세 전망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목표 년도 2013년, 부록 참조)를 감안하여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표 5-4. 농업생산의 비전과 목표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농업총생산액 (조원)	35.1	34	32	31
- GDP 비중 (%)	2.9	2.5	1.8	1.5
경지면적 (만ha)	182	174	157	142
- 호당 경지면적 (ha)	1.4	1.7	2.1	2.4
논벼 재배면적 (만ha)	98	90	80	70
- 쌀 단수 (kg/10a)	490	493	497	500
경지정리율 (총논면적 대비, %)	65	75	90	100
배수개선율 (%)	68.8	81	92	100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비중 (%)	4	10	15	20

- 농업총생산액의 GDP 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1.5% 정도로 수렴할 것임.
 - 농업총생산액은 추세치(30.6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경지면적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여 위기시 식량안보에 대비하게 될 것임.
 - 경지면적은 추세치(1,411천ha)를 유지하고, 농가호수 감소에 따라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2.4ha로 증가할 전망
 - 논벼 재배면적은 쌀 관세화유예가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추세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생산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에는 경지정리율 및 배수개선율을 100% 달성할 것임.
- 기초식량 자급을 기본으로 신선채소, 축산물, 과일 등은 친환경 고 품질 생산체제를 확립할 것임.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비중은 2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4. 농산물 유통과 소비의 비전

□ 추세 전망

-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 비중이 축소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
 - 2006년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액은 약 9.5조원, 전체 농산물 판매액의 20% 수준을 점유
-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1992년에 미곡종합처리장(RPC), 1993년에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하기 시작하여 2005년 산지유통 점유량은 RPC 40%, APC 26.8%

- 농식품의 가계 소비보다 업소용 식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가계 식료품비의 외식비 비율 : ('00) 39.4% → ('05) 46.4
 - 신선 식자재 시장규모는 현재 2005년 4조원 수준에서 대략 10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에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임.
 - 1인당 쌀 소비량 : ('05) 80.7kg → ('10) 74.4 → ('20) 67.1 → ('30) 60.1
 - 1인당 배추 소비량 : ('05) 25.4kg → ('10) 26.0 → ('20) 25.5 → ('30) 24.3
 - 1인당 사과 소비량 : ('05) 7.5kg → ('10) 8.3 → ('20) 7.0 → ('30) 7.4
 - 1인당 쇠고기 소비량 : ('05) 6.6kg → ('10) 9.4 → ('20) 12.8 → ('30) 14.6
 - 1인당 돈육 소비량 : ('05) 17.4kg → ('10) 18.1 → ('20) 20.5 → ('30) 22.9

□ 비전과 목표

- 농산물 유통 및 소비의 추세 전망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목표년도 2013년, 부록 참조)를 감안하여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표 5-5. 농식품 유통·소비의 비전과 목표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농산물 소비량				
- 쌀 1인당 소비량 (kg)	80.7	75	68	63
- 쇠고기 1인당 소비량 (kg)	6.6	10	13	15
산지유통 전문조직				
- RPC 처리 비중 (%)	40.0	50	70	85
- APC 처리 비중 (%)	26.8	40	60	80
표준규격 공동출하 비율 (%)	54.5	60	70	80
신선 식자재 시장 (조원)	4	6	8	10
농축산물 수출 (억\$)	20.7	40	70	100

- 쌀 소비촉진 시책을 통해 소비 추세는 일본보다 다소 높은 1인당 63kg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 *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79kg에서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어 2005년 61kg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
- 전문적인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가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농산물 유통을 주도할 것임.
 -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처리 비중이 증가하여 RPC는 85%, APC는 80% 수준으로 확대
 -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청과물시장 거래의 70% 점유
- 산지유통조직을 통한 공동출하·공동계산제가 확산되어 정착될 것임.
 - 농산물의 표준규격 공동출하 비율이 80% 수준으로 확산될 전망
- 선진적인 안전농식품 생산·유통체계가 구축될 것임.
 - 생산이력제, GAP 농산물, HACCP 축산물 등의 정착
 -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상물분리 유통 실현
-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임.
 - 농축산물 수출액은 100억\$ 수준으로 증가

5. 농가소득의 비전

□ 추세 전망

- 농업생산 감소에 따라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임.
 - 농업총소득 : ('05) 15.0조원 → ('10) 11.9 → ('20) 10.0 → ('30) 9.2

* 단, KREI-ASMO 개도국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 이하 동일

- 농가호당 소득은 총농가 수의 감소로 인해 증가하며, 소득 구성에서 이전수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호당 농가소득 : ('05) 3,050만원 → ('10) 3,453 → ('20) 5,019 → ('30) 6,920
 - 농외소득 비중 : ('05) 32.4% → ('10) 34.4 → ('20) 36.4 → ('30) 38.5
 - 이전수입 비중 : ('05) 28.9% → ('10) 34.7 → ('20) 37.5 → ('30) 40.2
- 도농간 소득격차는 호당 비교시 차이가 크므로, 가구원 수를 감안하여 1인당 소득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인당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 : ('05) 95.2% → ('10) 97 → ('20) 100 → ('30) 102
 - * 단, 가구원 1인당 소득의 1985년 이후 시계열 추세치
-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접지불제 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현재 6종의 직접지불제(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 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실시중
 -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의한 2013년 농가소득의 직접지불액 비중은 10% 목표
-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 2005년 기준 농어민연금 가입자는 346천명이며, 가입후 20년이 되는 2014년부터 61세 이상 농업인이 연금수급 대상으로 편입

□ 비전과 목표

- 농가소득의 추세 전망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목표 년도 2013년, 부록 참조)를 감안하여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

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표 5-6. 농가소득의 비전과 목표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호당 농가소득 (만원)	3,050	3,700	5,200	7,000
- 농외소득 비중 (%)	32.4	35	38	40
- 직접지불 비중 (%)	2.5	7	15	20
도농간 소득격차 (1인당 농가소득/도시근로자 가계소득, %)	95.2	98	102	105
직접지불제 투융자 비중 (%)	12.4	17	24	3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	23.4	26	31	36
농업인 연금 수급자 (만명)	3	20	35	45
- 월평균 연금수급액 (만원)	12	16	23	30

- 농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균형 실현, 전업농 소득은 자영업자 수준을 상회하게 될 것임.
 -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7천만원 수준, 전업농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
-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등으로 전업농은 안정된 경영을 유지할 것임.
 -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접지불액 비중이 평균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품목별 직접지불제도는 농가단위 경영안정제도로 정착
 -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확충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이 36%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고령농업인은 2014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을 받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임.
 - 월 평균 연금수급액은 30만원 수준으로, 농지임대수입을 포함하여 고정수입이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

6. 농촌공간과 생활의 비전

□ 추세 전망

-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인구에서 농가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농촌지역의 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임.
 - 농촌인구 비율(읍면인구/전체) : ('05) 18.1% → ('10) 16.3 → ('20) 13.2 → ('30) 10.4
 - 농가인구/농촌인구 비율 : ('05) 39.4% → ('10) 36.8 → ('20) 29.1 → ('30) 28.7
- 농촌마을의 공동체적 성격이 점점 취약해지는 추세임.
 - 2005년 현재 20호 미만 농가로 구성된 마을이 전체의 31% 점유

표 5-7. 농림어가 규모별 마을 수(2005년)

단위: 마을, %

구 분	계	1~9	10~19	20~29	30~39	40~49	50가구 이 상
농 가	35,534 (100.0)	3,044 (8.6)	8,002 (22.5)	9,345 (26.3)	6,726 (18.9)	4,002 (11.3)	4,415 (12.4)
임 가	16,811 (100.0)	14,401 (85.7)	1,607 (9.6)	511 (3.0)	176 (1.0)	72 (0.4)	44 (0.3)
어 가	5,224 (100.0)	3,345 (64.0)	683 (13.1)	434 (8.3)	268 (5.1)	182 (3.5)	312 (6.0)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 농촌 정주여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은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으나, 농가의 주거환경은 아직 낙후된 실정임.
 - 농가의 자동차 보유율 : ('00) 41.4% → ('05) 51.9
 - 컴퓨터 보유율 : ('00) 24.1% → ('05) 37.0
 - 농가의 입식부엌 비율 : ('00) 89.6% → ('05) 95.8

- 수세식화장실 보유율 : ('00) 52.2% → ('05) 73.5
- 상수도 보유율 : ('00) 22.4% → ('05) 34.3

□ 비전과 목표

- 농촌인구의 추세 전망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목표년도 2013년, 부록 참조)를 감안하여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표 5-8. 농촌공간·생활의 비전과 목표

지표 명	2005	2010	2020	2030
농촌인구 (만명)	870	850	800	730
- 농촌인구/총인구 비율 (%)	18.1	17.5	16	15
- 농가인구/농촌인구 비율 (%)	39.4	33	25	20
농촌생활 편익시설				
- 수세식 화장실 보급율 (%)	73.5	85	95	100
- 상수도 보급률 (%)	34.3	60	90	100
- 자동차 보급률 (%)	51.9	60	80	90
- PC 보급률 (%)	37	50	70	80
농어촌 마을종합개발 (권역)	36	220	500	1,000

- 농촌은 농업생산 공간에서 국민의 산업·생활공간으로 변모할 것임.
 - 복합생활공간 조성 등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를 억제하여 총인구 15% 수준으로 수렴
-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넓어짐.
 - 자동차 보급률은 90%, PC 보급률은 80% 수준까지 확산
- 농촌마을 생활기초시설은 중소도시 수준으로 향상될 것임.
 - 농가주택의 수세식화장실, 상수도 보급 완비

7.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전망

□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 생명공학기술(BT)이 다양하게 농업 부문에 활용될 전망이다.
 -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기능성 식품 등은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바이오장기, 줄기세포 등도 개발단계에 진입
- 유전자 보호가 강화되고, 종자산업이 발전할 것임.
 - 유전자원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토종 농축산물의 품종 보전과 육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
 - 딸기 국산품종 점유율 전망 : ('05) 9% → ('10) 30 → ('20) 60 → ('30) 70
-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농촌정보화가 보편화될 것임.
 - 시설자동화 진전과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실현
 -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 원격탐사(Remote Sensing)를 통한 농업관측 실현
- 친환경기술(ET)과 대체에너지 농업이 발전할 것임.
 -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의 적용 확산
 -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등의 보편화

□ 농촌관광 산업화

-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농촌관광 비중 전망 : ('05) 15% → ('10) 20 → ('20) 40 → ('30) 45
 - * 프랑스에서 농촌관광은 국내관광의 50% 정도를 점유
- 우리나라의 농촌관광도 유럽과 같이 단순한 도농교류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는 경향임.

- 경관농업, 휴양레저농업, 도시(정원)농업과 연계
- 농촌관광마을 수 전망 : ('05) 300개소 → ('10) 800 → ('20) 1,700
→ ('30) 2,000

표 5-9. 농어촌관광사업 운영 마을수

단위 : 마을수, %

전국 마을수	소 계	농림수산물 직 판 장, 도시 직거래	농 어 촌 체험관광	민 박, 음식점	기타
36,041	1,632 (100.0)	259 (15.9)	685 (41.9)	569 (34.9)	119 (7.3)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표 5-10. 농촌관광 수요 전망

단위: 만명, %

	국내여행 인구 총량 (A)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인구(B)	비중 (B/A)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 인구(C)	비중 (C/A)
2005	25,779	3,867	15.0	464	1.8
2010	27,848	5,708	20.5	801	2.9
2015	29,414	8,426	28.6	1,308	4.4
2020	31,067	12,438	40.0	2,136	6.9
2030	59,468	27,102	45.6	5,692	9.6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07을 기초로 재추정(김용렬 박사).

제 6 장

농업 비전 2030을 향한 정책 과제

1. 2030년까지의 농정 여건

□ 국제적 여건

-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우리 농업도 완전히 열린시장으로 이행하게 될 것임.
 - 향후 WTO/DDA 협상에 따라 2020년 이전에 개도국 수준의 관세 감축을 종료하게 될 것이며, 검역 등 비관세 조치도 국제수준으로 표준화되어 갈 것임.
 -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 유통업체에 의한 수입농산물 판매가 용이해지며,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협동조합의 신용사업도 경쟁체제에 놓이게 될 것임.
- 경제체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농정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전되면서 선진국형 정책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 국내보조는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되거나 철폐될 것이며, 규제완화가 가속화되어 시장경쟁 체제가 성숙될 것임.

□ 국내 정치·경제적 여건

-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GNI) 4~5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고소득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 양식과 국민의식의 전환이 뚜렷해질 것임.
 - 고소득 시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로 제품 차별화가 가속화 되고, 외식산업의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됨.
- 통일한국 시대가 가시화될 것임.
 - 한반도는 인구 7천만명의 내수시장을 형성하면서 농업 생산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될 것임.
 -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술·자재산업, 농업구조개혁 등의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농업 여건

-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전업농 중심의 생산체제가 정착될 것임.
 - 해방 이전 출생한 고령농업인이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도시 출신 귀농자 및 청년 취농자들이 주력을 형성하게 될 것임.
 - 전업농과 농업법인(기업농 포함)의 농업생산 비중이 80% 정도를 점유하게 되고, 고소득 농업인과 농기업가의 성공사례가 늘어나면서 청년층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풍조가 형성될 것임.
- 농산물의 상품성이 제고되어 신수요가 개발될 것임.
 - 농산물 규격화·브랜드화가 보편화되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의 전문가공유통법인 및 산지유통전문회사의 계열화가 성숙되어 고부가가치를 추구할 것임.
- 지구온난화·사막화 진전, 물 부족 등으로 식량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국가적 차원의 식량안보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이 공업위주 성장전략 및 소비증가로 곡물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WTO 체제하 농업보호의 퇴조는 세계적으로 식량공급 감축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선진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농업이 원천적으로 맡고 있는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토지비축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 뿐 아니라 농촌사회 유지, 도시집중 억제, 농업고용, 노령인구 부양 등 사회적 기능도 계속 증가할 것임.
 - 농촌지역과 농산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문화 상품으로 인식될 것임.

□ 농촌 여건

-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 농업인이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 고령농업인들은 재촌지주로서 농촌에 거주하고, 도시로부터 은퇴 귀농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함.
 - 결혼이민자(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응 및 정책적 지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임.
- 농촌지역도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할 것임.
 - 인터넷, 와이브로(WiBro), 화상전화 등으로 영농이 편리해지고, 원격진료와 같은 복지서비스가 확충될 것임.
- 전원마을이 확산되고 농촌관광산업이 성장할 것임.
 -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출퇴근 농장경영 방식이 보편화될 것임.
 - 관광농원이 농촌지역경제의 중요한 사업분야로 정착될 것임.

2. 비전 2030 준비를 위한 정책 과제

2.1. 미래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농정 목표는 국민 식량의 안정공급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는데 둠.

- 식량안보를 위하여 기초식량의 자급을 기본으로 해외조달 능력 제고를 통하여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식량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함.
 -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항구적인 식량기반 구축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식량안보 추구
 - 식품안전성 관리체제의 확립을 통한 질적인 측면의 식량안보 추구
- 농림·식품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 및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 농업부문 지식의 창출·배분·활용을 위한 지식공유 기반 구축과 주도인력으로 신지식 농업인 육성
 - 농촌토지이용의 농업적·비농업적 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생활기반을 정비하고 다양한 2·3차산업 육성
-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및 경제적·규제적 수단의 적절한 결합으로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보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적 수단과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상호준수(cross-compliance)를 유도

□ 농정 대상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전체를 포괄해야 함.

- 농업경영체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농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함.

- 농업인프라를 정비하고 위험관리(risk-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업여건이 불리한 중소농·중산간지역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활력을 높임.

- 소비자를 중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생산자 중심의 증산농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농산물·식품의 공급,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
 - 농산물·식품소비와 농업생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의 수집·분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도농간의 정보교류를 확대
 -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무질서한 농지전용과 경관훼손 등을 지양하여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의 거주·휴양·문화공간으로 정착

□ 농정 수단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율농정을 추구해야 함.

- 정부·유관기관과 단체·농업인의 역할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농정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정부는 농업·농촌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확립, 시장실패 보완, 농업관련 위험관리정책 등에 중점
 - 협동조합 등 단체는 개별농업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가공·유통사업을 담당하면서 지도·농정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
 - 농업인은 자기 책임 하에 농업경영을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 정책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농정 추진을 위한 개혁과 관련제도 정비가 지속되어야 함.
 - 정책기획 및 집행과정에 정책수요자와 일선기관, 특히 농업분야 및 환경·소비자 관련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강화

- 투융자 집행의 점검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쌍방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류(feed back) 체제 확립
- 중앙정부의 기능 전환과 함께 현장농정이 강화되어야 함.
 - 중앙부서는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집행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이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
 - 관주도의 농정을 탈피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참여를 토대로 한 “열린농정”을 적극 실천하면서 농정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함.

표 6-1. 과거 농정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의 비교

20세기 농정	21세기 농정
<input type="checkbox"/> 농업관 ○ 폐쇄경제와 정부보호하의 식량산업 ○ 원료생산 위주의 단순한 1차산업 ○ 농지와 노동력에 의존하는 전통산업 ○ 고투입 화학농법에 의한 자연착취	<input type="checkbox"/> 농업관 ○ 개방경제하의 효율성 있는 식품산업 ○ 생산·가공·유통이 시스템화된 복합산업 ○ 첨단과학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장치산업 ○ 국토자원·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생명산업
<input type="checkbox"/> 농정목표 ○ 주곡의 안정적 자급 ○ 농가소득의 증대 ○ 농촌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input type="checkbox"/> 농정목표 ○ 국민식품의 효율·안전·안정 공급 ○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 향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증대
<input type="checkbox"/> 농정대상 ○ 주곡생산 위주의 농업 ○ 영세·소농위주의 농가 중심 ○ 농민의 생산·주거공간인 농촌마을	<input type="checkbox"/> 농정대상 ○ 국가적 공익에 기여하는 농업 ○ 농업인의 사업성 확보와 지역농업 발전 ○ 국민의 산업·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
<input type="checkbox"/> 농정방식 ○ 정부보호적 폐쇄농정 ○ 중앙집권적 획일농정 ○ 평균분산적 배분지원 ○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혼재	<input type="checkbox"/> 농정방식 ○ 시장경제적 개방농정 ○ 지방분권적 자율농정 ○ 발전유형에 따른 집중적 선별지원 ○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분리

2.2. 비전 2030을 향한 농정 과제

□ 농업구조조정 촉진

- 새로운 농업주체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농가등록제 및 법인경영체 등록제도 정비
 - 농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 청년 농업후계자를 위한 농장리스제 도입
- 고령농업인의 은퇴 및 탈농을 지원하는 제도를 체계화해야 함.
 - 고령농업인 소유농지의 농지은행 위탁관리 제도화
 - 은퇴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확충
- 농가계층간 갈등을 조정하여 유연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함.
 - 농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적용 확대
 - 영세소농을 위한 지방단위 농민시장(Farmer's Market) 활성화

□ 쌀 수급관리

- 장기적·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기조에 적극 대처해야 함.
 -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 한시적인 생산조정제 실시

□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정책

- 국민건강을 위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함.
 - 우수농산물 생산(GAP)과 생산이력제, 리콜제와 소비자보호
 - 식품안전관리 체제 정비

- 농식품 신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함.
 - 지역별·품목별 통합브랜드화 전략
 - 농식품 신유통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확장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BT, IT, ET 등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해야 함.
 -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확후관리기술 개발
 - 유전공학을 이용한 동식물 개량기술(GMO 및 안전성), 산업용 신기능·신소재 물질 개발
 - 물·에너지 절약형, 화학물질 저투입형기술 개발
 - 농작업생력화·자동화 기술 개발
- 새로운 기술보급시스템의 구축
 - 농업기술원과 농과대학을 지역기술 확산의 거점(cluster)으로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함.
 - 전략적 수출단지 조성
 - 수출대상국의 소비성향 조사 및 해외시장 개척

□ 지속농업 실현

- 한반도 전체의 친환경농업화를 추진해야 함.
 - 친환경농업 생산지침 마련, 환경기장(green accounting) 제도 도입
 - 경종·축산 연계한 지역순환농업시스템 구축
 -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산림농업(Agro-forestry) 확산
- 교토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함.

- 농업오염 규제, 메탄가스 배출규제

□ 전원시대의 농촌공간 정비

-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정주생활권을 광역화하고 정주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도시민을 위한 여가 휴양 레저 등 복합생활공간 조성
- 마을·리동·읍면지역의 선택적 집중개발이 필요함.
 - 정주체계상에서 인구부양력을 상실한 마을 등 정비 등 농촌지역의 계획적 재설계와 재개발 필요
- 농지의 전용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용허가 요건과 절차의 정비가 필요함.
 -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별로 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차등화

□ 고령화시대의 농촌복지 정책

-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가족경영협정, 농업정책 지원 우대 등
- 외국인 주부 및 2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배려
- 농촌고령인구를 위한 전원실버마을 건설 등을 준비해야 함.
 - 휴양·휴식공간 조성, 농촌환경 정화 등의 소일거리 제공
- 농업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확대해야 함.
 - 농지자산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에 대한 농가특례 적용

□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농업 관리

-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 농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공동체 전단계를 위한 농업분야의 법령 및 제도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붕괴 등에 대비한 비상관리대책 등
 - 북한 농지에 대한 구소유권 처리 대책
 - 북한 집단농장 관리대책

□ 농정조직의 혁신

- 농림부는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책임지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함.
 - 농식품 안전성 관리, 농촌지역 활성화의 전담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농업이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함.
 - 지역개발 정책과 투융자사업의 지방 이양

참 고 문 헌

- 김정호 외,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 분석』, 2006.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6.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
- 농림부, 『21C 농업·농촌 비전과 발전전략』, 2001.5.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 2004.12.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 농림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
- 농정연구센터,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 비전』(심포지엄시리즈), 2005.9.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비전 2030』, 2006.8.
- 박시현 외, 『농촌공간 2020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2.
- 정부·민간합동작업반,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199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농수산분야)』,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2007.1.
- He Kang et. al., Vision of 2050 Agriculture in China,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Press, 2004.

부록1: 전국 인구 추계

○ 통계청에서 추계한 전국 연령별 인구전망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전국 인구(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3,260	2,545	2,201	2,073	1,919	1,816
5-9세	3,521	3,234	2,517	2,178	2,051	1,836
10-14세	3,130	3,463	3,188	2,482	2,148	1,873
15-19세	3,842	3,136	3,402	3,133	2,440	1,989
20-24세	3,854	3,743	3,113	3,378	3,112	2,097
25-29세	4,353	3,844	3,721	3,096	3,360	2,412
30-34세	4,248	4,301	3,828	3,707	3,086	3,087
35-39세	4,273	4,233	4,270	3,804	3,684	3,333
40-44세	4,020	4,248	4,184	4,225	3,767	3,043
45-49세	2,921	3,960	4,192	4,135	4,181	3,620
50-54세	2,366	2,868	3,908	4,145	4,096	3,706
55-59세	2,006	2,270	2,805	3,830	4,070	4,087
60-64세	1,817	1,927	2,187	2,711	3,711	3,925
65-69세	1,381	1,683	1,811	2,071	2,581	3,792
70-74세	922	1,246	1,527	1,654	1,908	3,315
75-79세	608	762	1,067	1,306	1,429	2,124
80세 이상	483	676	952	1,350	1,783	2,581
계	47,008	48,138	48,875	49,277	49,326	48,635

□ 전국인구 남자(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1,716	1,325	1,141	1,074	990	934
5-9세	1,877	1,696	1,310	1,129	1,062	945
10-14세	1,651	1,842	1,671	1,291	1,113	965
15-19세	1,987	1,645	1,808	1,641	1,268	1,028
20-24세	1,990	1,933	1,641	1,805	1,638	1,092
25-29세	2,232	1,980	1,922	1,632	1,795	1,261
30-34세	2,177	2,210	1,977	1,919	1,631	1,630
35-39세	2,181	2,162	2,194	1,965	1,909	1,787
40-44세	2,045	2,169	2,132	2,167	1,943	1,607
45-49세	1,483	2,012	2,125	2,093	2,131	1,863
50-54세	1,194	1,443	1,966	2,083	2,056	1,888
55-59세	981	1,128	1,395	1,905	2,024	2,049
60-64세	852	914	1,068	1,326	1,816	1,922
65-69세	595	758	834	985	1,230	1,812
70-74세	353	508	659	730	874	1,532
75-79세	215	270	411	529	595	930
80세 이상	136	198	287	434	604	943
계	23,667	24,191	24,540	24,707	24,680	24,190

□ 전국인구 여자(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1,544	1,220	1,060	999	929	882
5-9세	1,644	1,538	1,207	1,049	989	891
10-14세	1,479	1,621	1,517	1,191	1,035	908
15-19세	1,855	1,492	1,594	1,493	1,172	960
20-24세	1,865	1,809	1,472	1,573	1,473	1,006
25-29세	2,121	1,864	1,799	1,464	1,565	1,151
30-34세	2,071	2,091	1,851	1,787	1,454	1,457
35-39세	2,093	2,072	2,076	1,839	1,776	1,546
40-44세	1,975	2,079	2,053	2,059	1,824	1,435
45-49세	1,438	1,949	2,067	2,042	2,049	1,757
50-54세	1,172	1,425	1,942	2,062	2,040	1,818
55-59세	1,025	1,142	1,410	1,925	2,046	2,038
60-64세	965	1,013	1,119	1,385	1,895	2,003
65-69세	786	925	978	1,087	1,351	1,979
70-74세	569	738	868	924	1,034	1,782
75-79세	393	492	656	776	834	1,193
80세 이상	348	478	664	916	1,179	1,638
계	23,341	23,947	24,334	24,570	24,646	24,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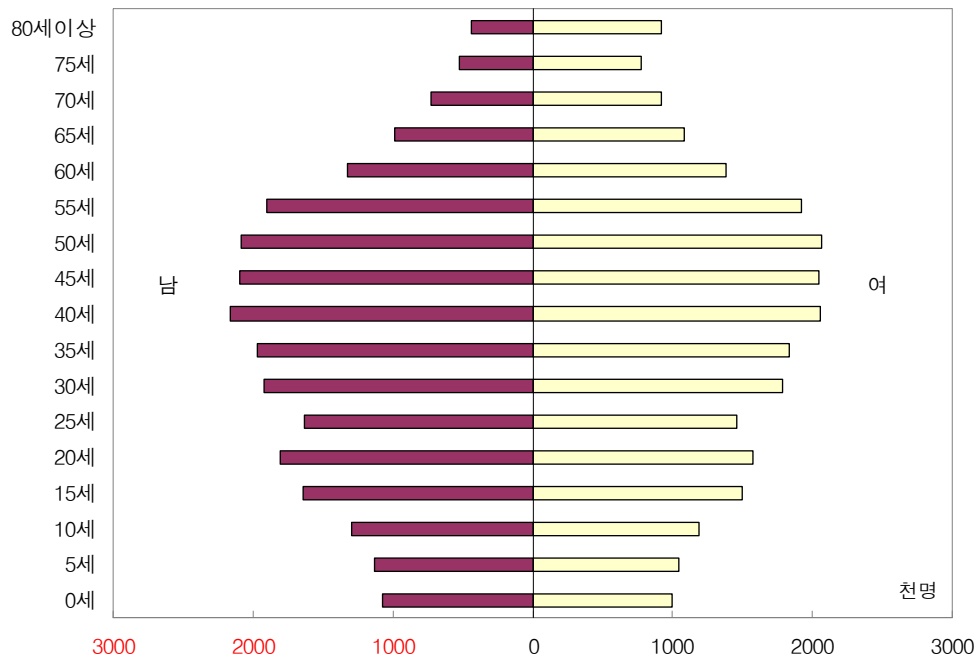
□ 2005년 전국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10년 전국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15년 전국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20년 전국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30년 전국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부록2: 농촌인구(읍면인구) 전망

- 1995, 2000, 2005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코호트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추정함.
 - 코호트분석법은 5년단위 연령계층의 변화율을 축차적으로 적용하는 추정방법이며, 농촌인구의 이혼률은 1995~2005년 추세를 적용하고, 출생률, 사망률 등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함.

□ 전체 농촌인구(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582	414	244	186	141	116
5-9세	615	544	379	223	170	106
10-14세	545	537	468	326	192	111
15-19세	652	471	460	401	279	126
20-24세	650	515	372	364	317	129
25-29세	648	498	392	283	276	167
30-34세	687	611	458	361	260	222
35-39세	718	638	554	416	328	231
40-44세	675	644	567	493	370	210
45-49세	544	649	619	545	474	280
50-54세	507	541	647	617	544	354
55-59세	534	505	544	651	620	475
60-64세	616	518	500	538	643	540
65-69세	542	574	493	474	511	582
70-74세	374	479	520	447	430	552
75-79세	251	301	405	439	377	388
80세 이상	204	265	362	480	566	490
계	9,343	8,704	7,984	7,244	6,497	5,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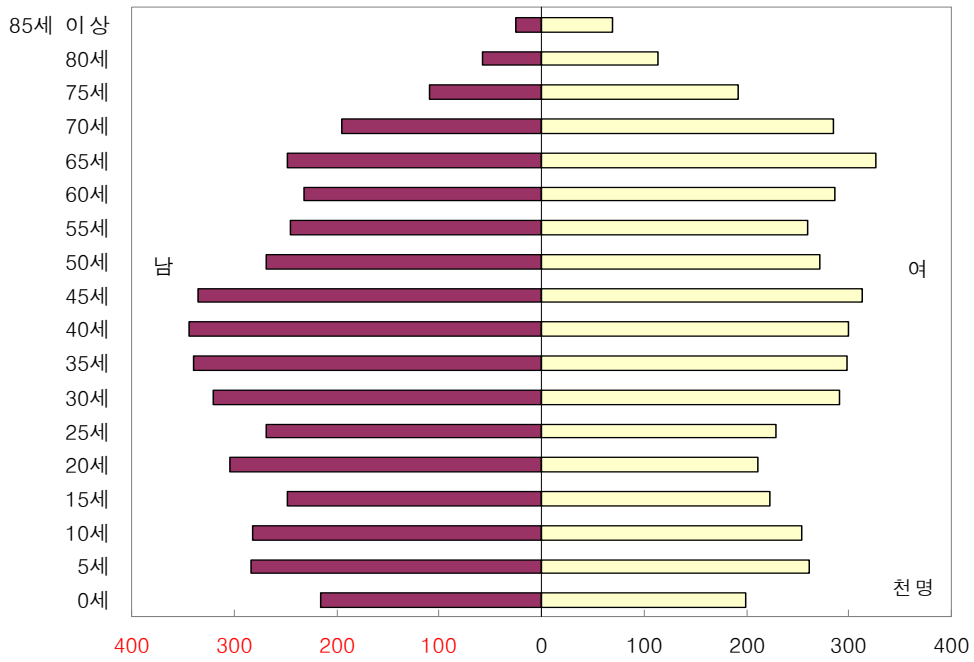
□ 농촌인구 남자(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305	216	126	96	73	60
5-9세	325	284	196	114	87	54
10-14세	283	283	243	168	98	57
15-19세	337	248	245	211	146	65
20-24세	384	304	223	221	190	76
25-29세	346	268	214	158	156	92
30-34세	360	320	245	196	144	122
35-39세	382	339	295	226	181	131
40-44세	357	343	303	263	202	118
45-49세	274	335	322	284	247	151
50-54세	250	269	330	317	279	186
55-59세	242	245	266	326	313	240
60-64세	274	231	238	259	317	268
65-69세	230	248	214	220	239	281
70-74세	145	195	216	186	191	255
75-79세	94	109	153	170	146	163
80세 이상	61	82	109	148	178	162
계	4,650	4,320	3,939	3,561	3,186	2,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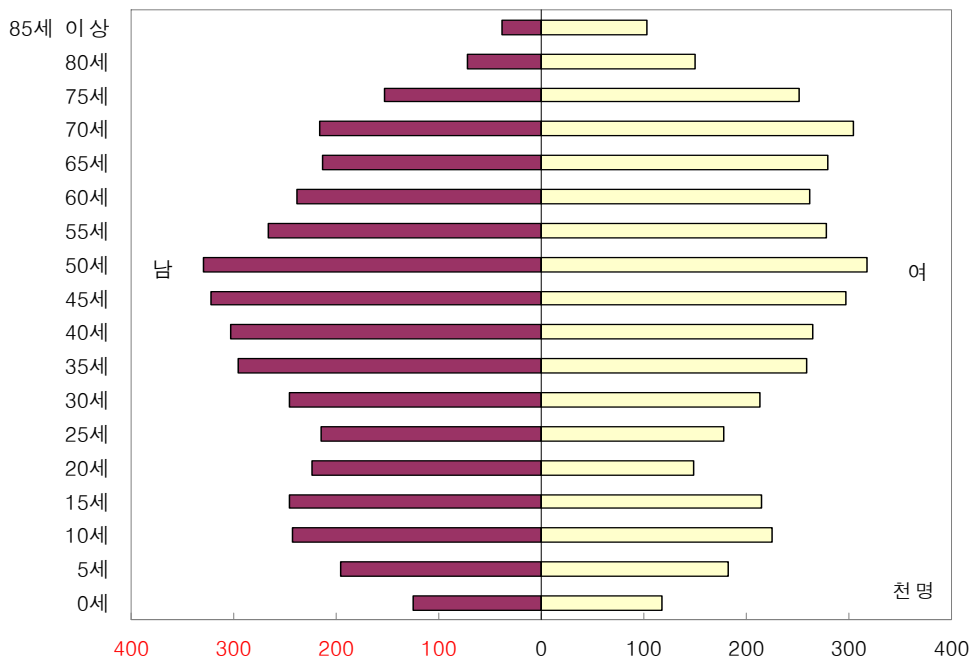
□ 농촌인구 여자(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277	199	118	90	69	56
5-9세	289	261	183	109	83	52
10-14세	262	254	225	158	94	54
15-19세	314	223	215	190	133	61
20-24세	266	211	149	143	127	53
25-29세	302	229	178	125	121	75
30-34세	327	291	213	165	116	99
35-39세	336	299	259	190	147	100
40-44세	317	300	264	229	168	92
45-49세	270	313	297	261	227	129
50-54세	257	272	317	300	265	168
55-59세	292	260	278	324	307	235
60-64세	342	287	261	279	326	272
65-69세	312	326	280	255	272	301
70-74세	228	285	305	262	238	297
75-79세	157	192	251	269	231	225
80세 이상	143	183	253	332	387	327
계	4,692	4,384	4,046	3,682	3,311	2,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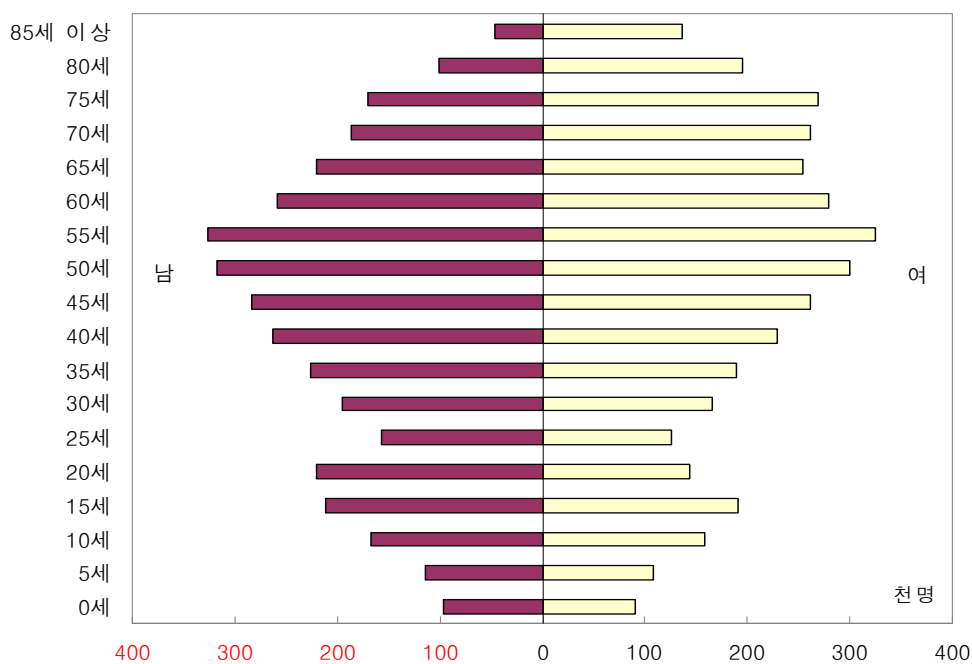
□ 2005년 농촌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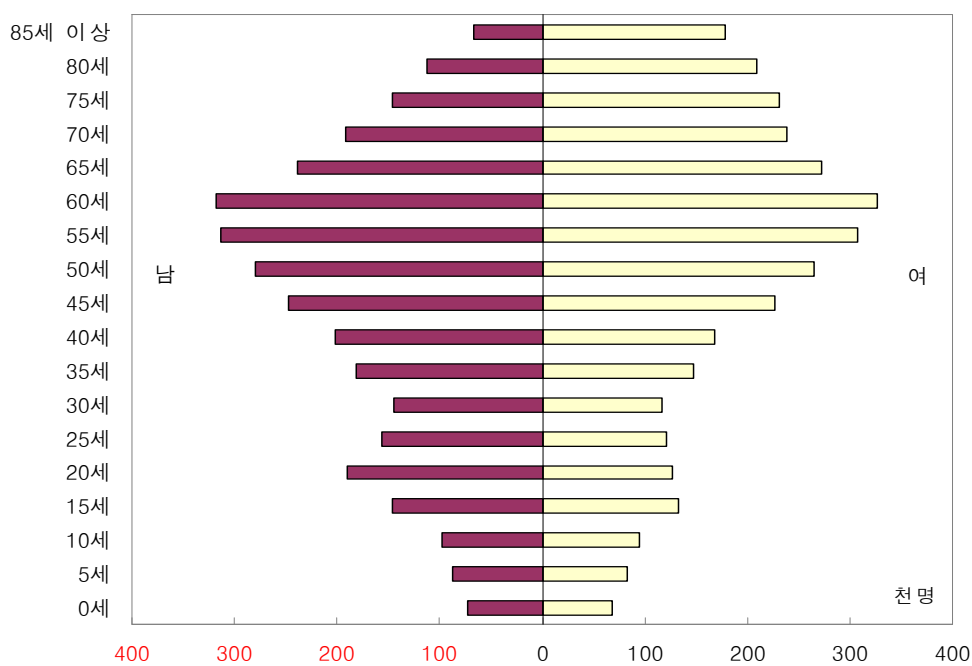
□ 2010년 농촌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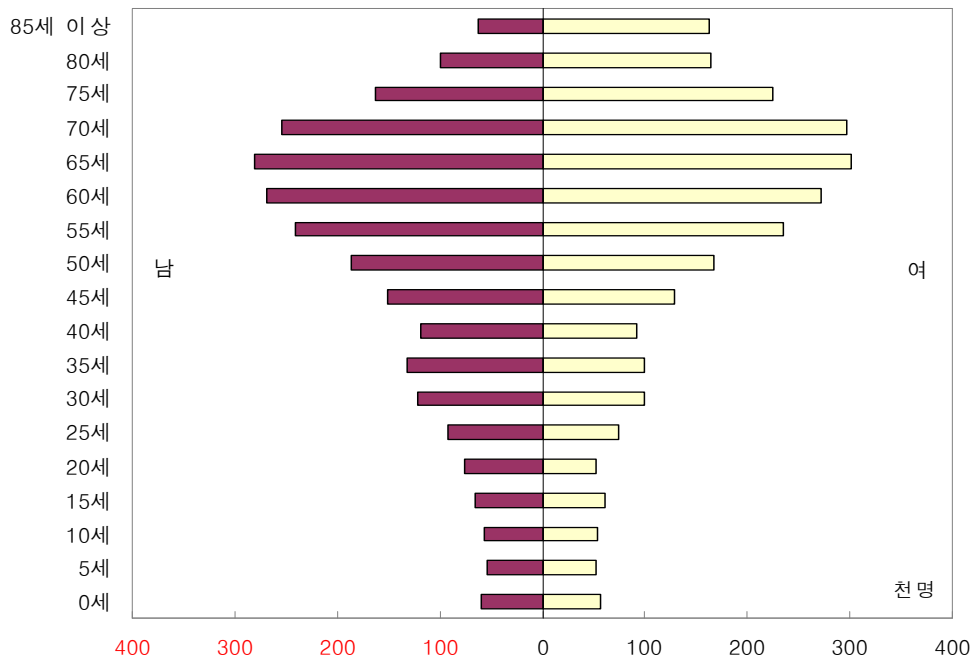
□ 2015년 농촌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20년 농촌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30년 농촌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부록3: 농가인구 전망

- 1995, 2000, 2005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코호트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추정함.
- 코호트분석법은 5년단위 연령계층의 변화율을 축차적으로 적용하는 추정방법이며, 농가인구의 이농률은 1995~2005년 추세를 적용하고, 출생률, 사망률 등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함.

□ 전체 농가인구(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107	67	37	25	16	13
5-9세	152	115	80	41	30	16
10-14세	200	153	119	77	43	24
15-19세	262	158	119	85	60	29
20-24세	220	149	88	61	48	22
25-29세	197	143	96	53	40	26
30-34세	155	119	91	56	34	24
35-39세	197	129	109	78	52	28
40-44세	260	185	128	100	78	37
45-49세	272	264	189	121	102	64
50-54세	307	284	277	184	128	101
55-59세	370	316	296	266	192	135
60-64세	457	352	311	268	263	158
65-69세	389	409	315	257	242	204
70-74세	236	309	328	233	208	229
75-79세	139	159	217	213	165	165
80세이상	112	123	140	166	189	182
계	4,031	3,434	2,941	2,284	1,890	1,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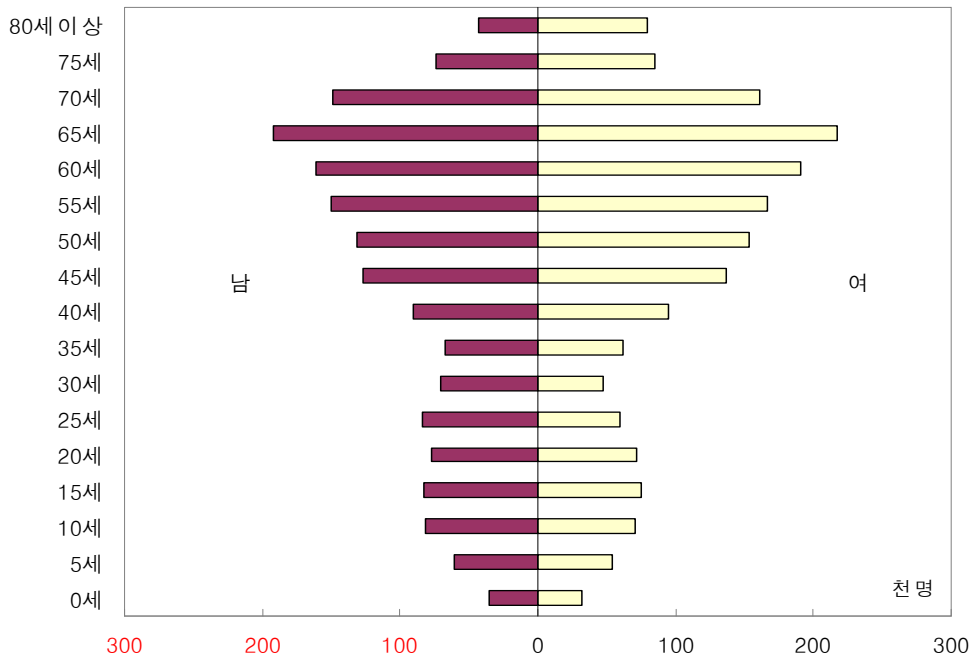
□ 농가인구 남자(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56	35	19	13	8	7
5-9세	81	61	42	21	15	8
10-14세	104	82	63	40	22	13
15-19세	134	83	65	46	32	15
20-24세	116	77	48	34	26	12
25-29세	124	83	57	32	25	16
30-34세	88	71	49	31	19	14
35-39세	99	68	61	39	27	16
40-44세	128	90	66	55	39	20
45-49세	127	126	90	61	56	32
50-54세	145	132	132	87	64	49
55-59세	165	150	137	126	91	73
60-64세	211	161	150	126	127	80
65-69세	182	191	145	124	114	98
70-74세	110	148	156	109	102	112
75-79세	64	74	102	98	75	77
80세 이상	36	43	51	62	70	66
계	1,971	1,677	1,431	1,105	912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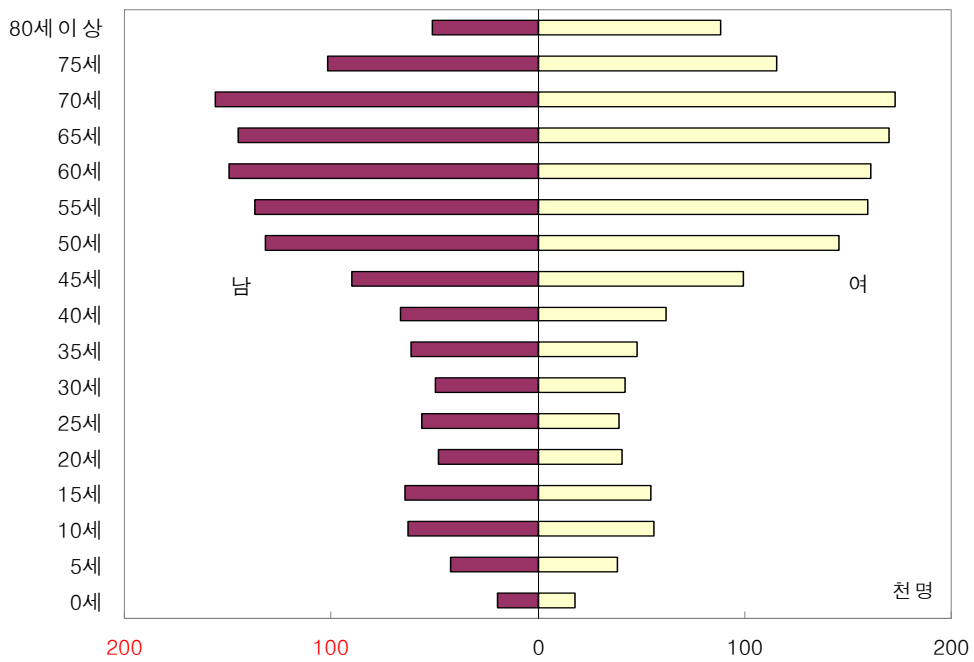
□ 농가인구 여자(천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0-4세	50	32	18	12	8	6
5-9세	71	54	38	20	14	8
10-14세	96	71	56	37	21	12
15-19세	128	75	54	40	28	14
20-24세	104	72	40	27	22	10
25-29세	74	60	39	20	15	10
30-34세	67	48	42	25	14	10
35-39세	98	62	48	39	25	13
40-44세	132	95	62	45	40	18
45-49세	145	137	99	60	47	32
50-54세	161	153	145	97	64	53
55-59세	204	166	159	140	102	62
60-64세	246	191	161	143	136	78
65-69세	207	217	170	132	128	106
70-74세	126	161	172	125	106	116
75-79세	75	85	116	115	90	88
80세 이상	76	79	89	104	119	116
계	2,060	1,757	1,510	1,179	978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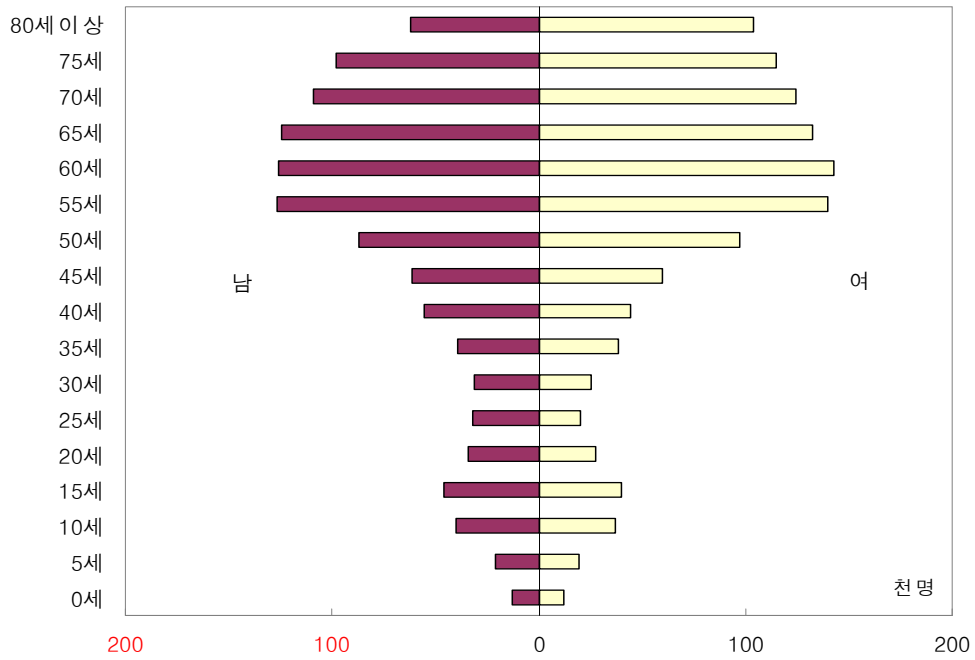
□ 2005년 농가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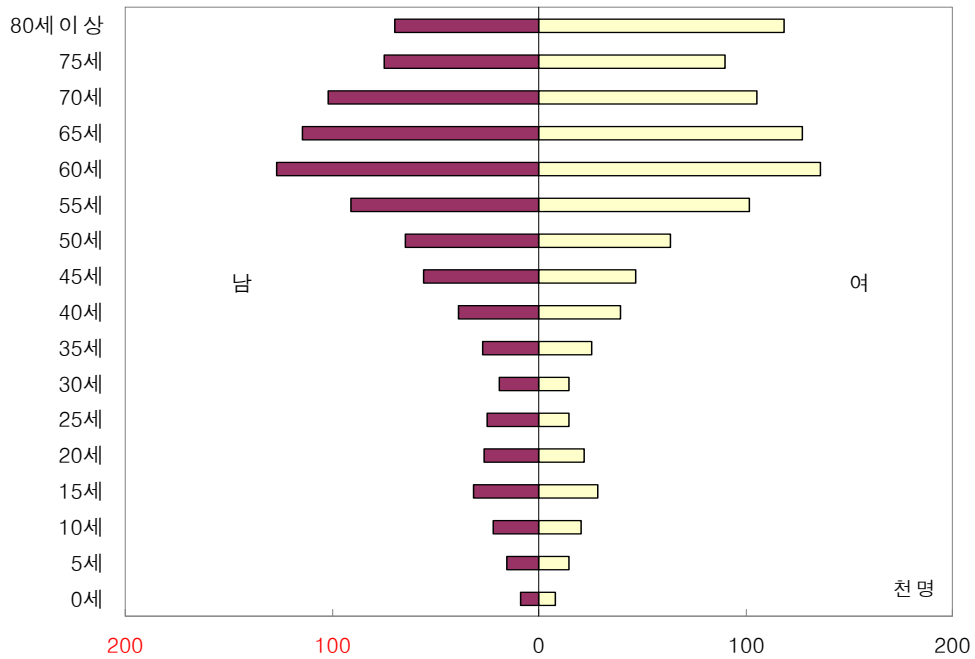
□ 2010년 농가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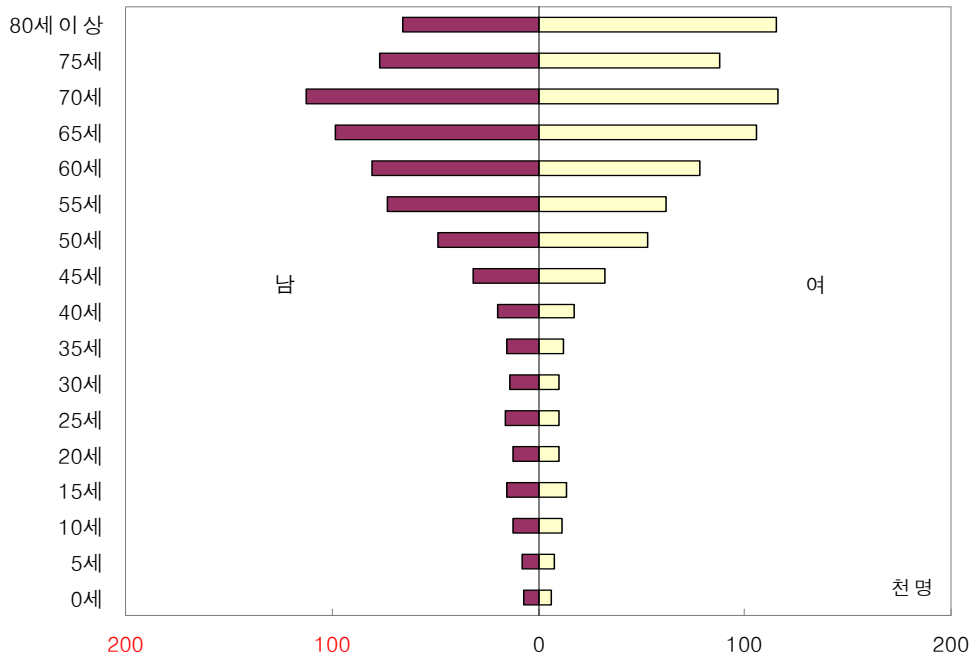
□ 2015년 농가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20년 농가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 2030년 농가인구 연령별 분포도(인구 피라미드)



부록4: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 1995, 2000, 2005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코호트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추정함.

- 코호트분석법은 5년단위 연령계층의 변화율을 축차적으로 적용하는 추정방법이며, 농업경영주의 진출입률은 1995~2005년 추세를 적용하고, 사망률 등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함.

□ 전체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7,270	84,246	23,7737	348,067	479,485	226,663	1,383,468
	비율(%)	0.5	6.1	17.2	25.2	34.7	16.4	100.0
2005년	농가수	2,382	40,010	185,849	302,852	430,473	311,342	1,272,908
	비율(%)	0.2	3.1	14.6	23.8	33.8	24.5	100
2010년	농가수	1,140	22,140	125,560	261,550	428,070	279,880	1,118,350
	비율(%)	0.1	2.0	11.2	23.4	38.3	25.0	100
2015년	농가수	530	8,390	58,890	207,400	367,780	239,990	882,980
	비율(%)	0.1	1.0	6.7	23.5	41.7	27.2	100
2020년	농가수	420	3,870	32,540	151,960	343,890	225,980	758,660
	비율(%)	0.1	0.5	4.3	20.0	45.3	29.8	100
2030년	농가수	210	2,200	10,620	80,580	314,970	215,510	624,070
	비율(%)	0.0	0.4	1.7	12.9	50.5	34.5	100

□ 논벼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3,827	39,297	115,471	195,131	297,809	135,916	787,451
	비율(%)	0.5	5.0	14.7	24.8	37.8	17.3	100.0
2005년	농가수	1,067	17,583	81,493	140,903	232,428	174,825	648,299
	비율(%)	0.2	2.7	12.6	21.7	35.9	27.0	100
2010년	농가수	480	10,830	58,440	118,350	227,270	152,900	568,280
	비율(%)	0.1	1.9	10.3	20.8	40.0	26.9	100
2015년	농가수	260	3,940	29,980	92,600	191,360	131,570	449,720
	비율(%)	0.1	0.9	6.7	20.6	42.6	29.3	100
2020년	농가수	220	1,840	17,740	67,770	175,330	123,360	386,260
	비율(%)	0.1	0.5	4.6	17.5	45.4	31.9	100
2030년	농가수	130	1,390	6,100	32,550	158,820	115,330	314,310
	비율(%)	0.0	0.4	1.9	10.4	50.5	36.7	100

□ 과수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717	10,000	28,103	40,277	46,094	18,171	143,362
	비율(%)	0.5	7.0	19.6	28.1	32.2	12.7	100
2005년	농가수	253	5,192	23,314	40,061	48,780	27,636	145,236
	비율(%)	0.2	3.6	16.1	27.6	33.6	19.0	100
2010년	농가수	90	2,700	17,170	34,890	53,820	28,970	137,630
	비율(%)	0.1	2.0	12.5	25.4	39.1	21.0	100
2015년	농가수	40	850	8,130	29,990	53,380	30,240	122,620
	비율(%)	0.0	0.7	6.6	24.5	43.5	24.7	100
2020년	농가수	20	290	4,100	25,260	53,460	30,470	113,610
	비율(%)	0.0	0.3	3.6	22.2	47.1	26.8	100
2030년	농가수	10	120	860	15,050	52,170	33,610	101,830
	비율(%)	0.0	0.1	0.8	14.8	51.2	33.0	100

□ 특용작물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198	2,816	8,264	9,864	11,461	5,044	37,647
	비율(%)	0.5	7.5	22.0	26.2	30.4	13.4	100.0
2005년	농가수	74	1,254	5,606	7,844	8,270	4,835	27,883
	비율(%)	0.3	4.5	20.1	28.1	29.7	17.3	100
2010년	농가수	40	790	3,700	6,740	7,540	3,910	22,720
	비율(%)	0.2	3.5	16.3	29.7	33.2	17.2	100
2015년	농가수	0	390	1,890	4,730	6,560	2,540	16,120
	비율(%)	0.0	2.4	11.8	29.4	40.7	15.7	100
2020년	농가수	0	160	1,180	3,620	5,410	2,010	12,400
	비율(%)	0.0	1.3	9.5	29.2	43.7	16.2	100
2030년	농가수	0	0	410	2,370	4,620	1,840	9,240
	비율(%)	0.0	0.0	4.4	25.7	50.0	19.9	100

□ 채소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1374	17053	46190	60532	75509	37633	238,291
	비율(%)	0.6	7.2	19.4	25.4	31.7	15.8	100.0
2005년	농가수	385	7,925	36,996	58,772	75,249	50,684	230,011
	비율(%)	0.2	3.4	16.1	25.6	32.7	22.0	100
2010년	농가수	150	4,000	24,850	51,460	78,940	50,270	209,660
	비율(%)	0.1	1.9	11.9	24.5	37.7	24.0	100
2015년	농가수	90	1,280	10,850	40,980	69,160	46,310	168,670
	비율(%)	0.1	0.8	6.4	24.3	41.0	27.5	100
2020년	농가수	80	500	5,450	29,400	67,450	45,260	148,140
	비율(%)	0.1	0.3	3.7	19.8	45.5	30.6	100
2030년	농가수	40	320	1,360	16,670	67,200	44,240	129,840
	비율(%)	0.0	0.2	1.0	12.8	51.8	34.1	100

□ 화훼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82	1416	2860	2219	1211	303	8,091
	비율(%)	1.0	17.5	35.3	27.4	15.0	3.7	100.0
2005년	농가수	50	751	2,964	3,472	2,151	808	10,196
	비율(%)	0.5	7.4	29.1	34.1	21.1	7.9	100
2010년	농가수	30	450	2,320	3,370	2,950	970	10,090
	비율(%)	0.3	4.5	23.0	33.4	29.2	9.6	100
2015년	농가수	0	220	1,130	3,250	3,200	1,080	8,880
	비율(%)	0.0	2.5	12.8	36.6	36.1	12.1	100
2020년	농가수	0	90	680	2,570	3,260	1,190	7,790
	비율(%)	0.0	1.1	8.8	32.9	41.9	15.3	100
2030년	농가수	0	0	220	1,980	3,240	1,470	6,920
	비율(%)	0.0	0.0	3.2	28.6	46.9	21.3	100

□ 전작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442	4758	12277	18666	32091	23696	91,930
	비율(%)	0.5	5.2	13.4	20.3	34.9	25.8	100.0
2005년	농가수	204	3,449	15,067	24,278	40,922	41,593	125,513
	비율(%)	0.2	2.7	12.0	19.3	32.6	33.1	100
2010년	농가수	100	1,380	8,230	21,150	33,030	32,720	96,630
	비율(%)	0.1	1.4	8.5	21.9	34.2	33.9	100
2015년	농가수	80	720	2,930	12,690	22,060	20,300	58,770
	비율(%)	0.1	1.2	5.0	21.6	37.5	34.5	100
2020년	농가수	60	410	1,360	6,840	18,710	16,620	44,000
	비율(%)	0.1	0.9	3.1	15.5	42.5	37.8	100
2030년	농가수	10	200	640	3,320	13,190	12,900	30,260
	비율(%)	0.0	0.7	2.1	11.0	43.6	42.6	100

□ 축산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595	8565	23599	20155	13991	5268	72,173
	비율(%)	0.8	11.9	32.7	27.9	19.4	7.3	100.0
2005년	농가수	344	3,711	19,818	26,659	21,616	10,135	82,283
	비율(%)	0.4	4.5	24.1	32.4	26.3	12.3	100
2010년	농가수	250	1,920	10,510	24,820	23,640	9,450	70,600
	비율(%)	0.4	2.7	14.9	35.2	33.5	13.4	100
2015년	농가수	60	980	3,830	22,660	21,400	7,520	56,450
	비율(%)	0.1	1.7	6.8	40.1	37.9	13.3	100
2020년	농가수	30	580	1,950	16,180	19,690	6,750	45,190
	비율(%)	0.1	1.3	4.3	35.8	43.6	14.9	100
2030년	농가수	10	170	1,020	8,520	15,240	5,870	30,830
	비율(%)	0.0	0.5	3.3	27.6	49.4	19.1	100

□ 기타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농가수	35	341	973	1,223	1,319	632	4,523
	비율(%)	0.8	7.5	21.5	27.0	29.2	14.0	100.0
2005년	농가수	5	145	591	863	1,057	826	3,487
	비율(%)	0.1	4.2	16.9	24.7	30.3	23.7	100
2010년	농가수	0	60	340	770	880	690	2,740
	비율(%)	0.1	2.3	12.3	28.0	32.0	25.2	100
2015년	농가수	0	10	140	500	660	450	1,750
	비율(%)	0.0	0.8	7.7	28.3	37.6	25.6	100
2020년	농가수	0	10	60	320	580	310	1,270
	비율(%)	0.0	0.5	5.0	25.0	45.1	24.3	100
2030년	농가수	0	0	10	120	470	240	830
	비율(%)	0.0	0.0	1.4	13.9	56.4	28.3	100

부록5: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 1990, 1995, 2000, 2005년도 농업총조사 및 가축통계를 이용하여 경영 규모 계층별 농가비율의 추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정함.
 - 경종농업은 농업총조사 1990, 1995, 2000년 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5년간 변화율 추세가 2015, 203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축산은 가축통계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5년간 변화율 추세가 2015, 203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논

단위 : %

구 분	0.5ha 미만		0.5-3ha		3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40.36	15.74	58.46	78.08	1.17	6.19
1995	41.16	14.38	56.02	70.82	2.83	14.80
2000	42.25	13.75	53.97	66.21	3.79	20.04
2005	43.08	11.73	51.99	61.90	4.93	26.37
2010	43.26	10.52	50.08	57.88	6.66	31.60
2015	42.78	9.06	48.25	54.11	8.97	36.83
2020	41.79	7.35	46.48	50.59	11.73	42.07
2030	36.80	6.35	43.14	44.22	20.06	49.43

□ 밭

단위 : %

구 분	0.3ha 미만		0.3-2ha		2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56.03	19.95	42.41	67.45	1.56	12.59
1995	52.33	16.21	45.15	65.81	2.52	17.98
2000	53.68	14.90	43.16	61.14	3.16	23.95
2005	54.86	13.27	41.26	56.81	3.89	29.93
2010	55.85	11.32	39.44	52.78	4.71	35.90
2015	56.63	9.09	37.70	49.04	5.67	41.87
2020	57.17	7.59	36.04	45.56	6.79	46.85
2030	57.55	5.38	32.90	39.33	9.55	55.29

□ 과수

단위 : %

구 분	0.3ha 미만		0.3-1ha		1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47.98	15.41	41.53	46.34	10.49	38.25
1995	41.21	11.90	45.20	45.23	13.58	42.87
2000	40.51	10.77	45.40	44.91	14.09	44.33
2005	39.79	9.63	45.60	44.59	14.61	45.78
2010	39.06	8.49	45.80	44.27	15.15	47.24
2015	38.32	7.34	46.00	43.96	15.69	48.70
2020	37.56	6.20	46.19	43.65	16.24	50.16
2030	36.02	3.90	46.60	43.03	17.38	53.07

□ 시설원예

단위 : %

구 분	300평 미만		300-2000평		2000평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24.78	4.00	69.07	70.50	6.15	25.53
1995	20.87	2.48	66.78	59.21	12.35	38.31
2000	49.94	3.45	39.56	49.49	10.50	47.06
2005	52.15	5.72	38.24	41.37	9.61	52.91
2010	54.01	11.13	36.97	34.59	9.02	54.29
2015	56.74	14.97	35.74	28.91	7.53	56.11
2020	59.33	17.51	34.55	24.17	6.12	58.32
2030	63.70	21.45	32.29	16.89	4.01	61.66

□ 한우

단위 : %

구 분	10두 미만		10-29두		3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6.21	72.11	3.31	18.00	0.47	9.89
1995	88.08	51.86	10.25	31.49	1.67	16.64
2000	88.64	39.44	8.27	24.12	3.09	36.44
2005	78.38	26.96	14.75	26.13	6.87	46.90
2010	69.29	18.32	21.23	27.31	9.47	54.37
2015	57.85	12.49	27.72	28.67	14.43	58.84
2020	47.59	9.97	34.20	29.73	18.21	60.30
2030	30.06	6.06	45.66	31.30	24.28	62.63

□ 낙농

단위 : %

구 분	10두 미만		10-49마리		5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38.87	14.49	59.15	74.11	1.98	11.40
1995	14.99	3.45	79.38	78.76	5.63	17.79
2000	6.20	0.75	65.83	48.84	27.97	50.41
2005	4.81	0.45	45.32	27.92	49.87	71.64
2010	3.41	0.18	34.81	16.96	61.78	82.86
2015	2.02	0.14	24.30	7.77	73.68	92.09
2020	1.62	0.10	15.79	4.56	82.58	95.33
2030	0.83	0.05	6.78	2.18	92.39	97.77

□ 양돈

단위 : %

구 분	100두 미만		100-999두		100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3.43	23.83	6.27	52.91	0.30	23.26
1995	74.38	7.56	23.19	55.92	2.43	36.53
2000	58.19	2.43	31.99	37.39	9.82	60.18
2005	43.16	1.02	32.83	21.13	24.01	77.85
2010	31.52	1.02	33.67	16.46	34.80	82.52
2015	23.08	0.86	34.51	10.95	42.40	88.19
2020	16.05	0.63	35.35	7.51	48.60	91.86
2030	4.97	0.18	37.03	3.62	57.99	96.20

□ 양계

단위 : %

구 분	100두 미만		100-999두		100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6.50	4.59	3.31	65.50	0.19	29.92
1995	97.78	3.38	1.88	52.66	0.34	43.96
2000	98.17	2.27	1.31	37.64	0.52	60.09
2005	97.56	1.46	1.37	24.80	1.06	73.74
2010	97.14	1.17	1.44	20.34	1.42	78.48
2015	96.34	0.95	1.51	16.77	2.15	82.28
2020	95.73	0.72	1.57	13.10	2.70	86.19
2030	94.51	0.32	1.70	7.08	3.79	92.60

부록6: 농업·농촌종합대책 주요사업 목표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2004.10)』에 수록된 주요 사업의 실천계획과 목표를 정리한 것임.

□ 농업구조조정 지원

- 쌀 전업농 3ha 이상 농가수 : ('03) 42.5천호 → ('06) 50.3 → ('10) 70
- 평균 경영규모(호당) : ('03) 3.8ha → ('06) 4.5 → ('10) 6.0
- 밭 농업 1ha 이상 농가 수 : ('03) 127천호 → ('08) 130 → ('13) 138
- 생산규모 : ('03) 45% → ('08) 46 → ('13) 48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04~05) 1,000개소 → ('06~08) 1,200 → ('09) 1,500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확대 : ('04) 5.3천ha → ('06) 13.2 → ('10) 17.8
- 과실 선도농 육성(1.5ha 이상) : ('02) 18천호 → ('10) 22
- 2010년 총 생산량의 50%
- 양념류주산지 구조개선 : ('07) 5개소, 100억원 → ('13) 30, 600
- 양념류주산지 경쟁력제고지원 : ('07) 5개소, 100억원 → ('13) 40, 800
-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 대상: ('04~05) 1천ha → ('06~08) 20 → ('09) 27

□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사업지구 : ('05) 721개소조성 → ('08) 933 → ('13) 1,500
-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 : ('06~'08) 6,800ha → ('09~) 13,200ha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06~'08) 15단지조성 → ('09~) 35
-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 ('06~'07) 1개소, 수도권 → ('08~'09) 1개소, 중부지역 → ('10~) 3개소, 부산등 대도시권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 ('03) 2% → ('05) 5 → ('10) 10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06) 시범실시 → ('07~'09) 전체친환경농산물의 20% → ('10~) 30%
-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 산도(pH)함량 : ('04~'05) 5.7 → ('06~'08) 5.9 → ('09~) 6.5(적정치)

- 유효규산함량(ppm) : ('04~'05) 86 → ('06~'08) 90 → ('09~) 130(적정치)
- 유기물 함량(%) : ('04~'05) 2.2 → ('06~'08) 2.5 → ('09~) 3.0(적정치)
- 겨울철 녹비·사료작물 : ('03) 120천ha → ('04) 130 → ('05~'13) 1,48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조사료 급여비율 : ('04~'05) 45% → ('06~'08) 50% → ('09~) 60%
 - 총채보리 재배면적 : ('04~'05) 2,000ha → ('06~'08) 6,000 → ('09~) 8,000
 - 사료작물 재배면적 : ('04~'05) 92천ha → ('06~'08) 110 → ('09~) 120
- 농식품안전관리 강화
 - 산지 거점 시·군 정밀분석실 확충 : ('03) 9개소 → ('09) 47
 - 안전성조사 확대 : ('03) 58천건 → ('13) 90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진관리제도
 - APC·RPC 설비 : ('05) 2개소 → ('08) 30 → ('13) 92%
 - GAP 인증인력 양성 : ('05) 50명 → ('06) 100 → ('13) 1,000
- 축산물 도축검사 강화 : ('05) 검사원 100명 → ('06) 150 → ('13) 640
- 한우 품질고급화(1등급출현율) : ('04~'05) 40% → ('06~'08) 50 → ('09~) 60

□ 농축산물 유통 개선

- RPC 산지 쌀 유통 중심체 육성
 - 유통량대비 저장능력 : ('04~'05) 27% → ('06~'08) 40 → ('09~'10) 50
 - 유통량대비 벼매입량 : ('04~'05) 50% → ('06~'08) 60 → ('09~'10) 70
-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
 - LPC 도축점유율 : ('04~'05) 소: 10%, 돼지: 15% → ('06~'08) 15, 20 → ('09~'10) 25, 30
 - HACCP적용 육가공공장 : ('04~'05) 150개소 → ('06~'08) 300 → ('09~'10) 500
- 농산물 물류 효율화(물류기기 사용률)
 - 도매시장 : ('03) 1.1% → ('07) 8.7 → ('13) 36.9
 - 대형 유통점 : ('03) 65% → ('07) 80 → ('13) 90
 - 산지유통센터 팔레트 출하율 : ('05) 10% → ('07) 30 → ('13) 50
-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율 : ('04~'05) 55% → ('06~'08) 60 → ('09~) 65
- 고품질과실 브랜드 유통 : ('04) 145천톤 → ('05) 160 → ('13) 330

- 인삼계열화사업(재배면적) : ('07) 20% → ('08~'09) 30 → ('10~) 40
- 가축계열화
 - ('04~'05) 돼지16%, 닭70%, 오리30% → ('06~'08) 돼지20%, 닭75%, 오리50% → ('09~) 돼지 30%, 닭80%, 오리50%

□ 농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 농림기술개발사업
 - ('04~'05) 농림기술중장기계획 → ('06~'08) 연구개발집중(BT, 신품종, 친환경) → ('09~) 고부가 농림업 실현
- 농업과학기술 개발
 - ('04~'05) 첨단농업기술개발 → ('06~'08) 고품질 농산물 개발 → ('09~) 지식주도형 고부가 산업 전환
- 농업생명공학 연구
 - ('04~'05) 원천기반확립 → ('06~'08) 실용화기반확립 → ('09~) 산업화
- 농업기술 농가보급 : ('04~'05) 연구개발비 10%투입 → ('06~'08) 15 → ('09~) 20
- 농업 정보화
 - ('04~'05) 기술정보 DB화 및 시스템개발 → ('06~'08) 예측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09~) 정보기술 이용 정밀농업실현

□ 임업·산촌 지원

- 임도시설 확충 : ('04~'05) 136km → ('06~'08) 1,580 → ('09~) 3,230
- 임업기계장비 도입 : ('04~'05) 31천대 → ('06~'08) 124 → ('09~) 155
- 임업기능인력 육성 : ('04~'05) 879명 → ('06~'08) 3,516 → ('09~) 4,395
- 목재 수급 기반 구축(자금률) : ('04~'05) 6% → ('06~'08) 6 → ('09~) 10%
- 해외조림 확대(해외조림률) : ('04~'05) 10% → ('07) 14% → ('13) 26%
- 산촌개발사업 : ('04~'05) 15마을(5%) → ('07) 125(45%) → ('13) 275(100%)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 직접지불제 확충(투융자예산 비중) : ('03) 9.4% → ('08) 22.6 → ('13) 22.9

-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쌀 생산조정제)
 - 논콩재배사업 : ('04) 7천ha → ('05~'08) 10천ha → ('09~) 10천ha 유지
 - 밭벼재배면적 : ('04) 18천ha → ('05~'08) 11천ha → ('09~) 5천ha
 - 농작물재해보험 : ('05) 6품목 → ('06~'08) 11 → ('09~) 32
 - 가축공제사업(가입률) : ('04~'05) 15% → ('06~'08) 30 → ('09~) 60
 - 농산물 자조금 지원 : ('04) 14품목 → ('05) 20 → ('13) 34
 - 채소수급안정사업 : ('04~'05) 적정생산량의 12% → ('06~'08) 16 → ('09~) 23
 - 재해대비 시설안전 강화
 - 수리시설개보수율 : ('04~'05) 62% → ('06~'08) 66 → ('13) 71
 - 방조제개보수율 : ('04~'05) 31% → ('06~'08) 44 → ('13) 76
 - 농업기반시설안전확보(계측기설치율) : ('04~'05) 6% → ('06~'08) 37 → ('09~) 74
 - 배수개선율 : ('05) 72% → ('08) 86 → ('11) 100
 - 수자원 개발 및 이용
 - 수리답률 : ('04~'05) 77% → ('06~'08) 80 → ('09~) 82
 - 수리안전답률 : ('04~'05) 39% → ('06~'08) 45 → ('09~) 55
 - 안전영농을 위한 기반정비
 - 대구획정리 : ('04~'05) 56% → ('06~'08) 64 → ('09~) 70
 - 경작로 확포장 : ('04~'05) 43% → ('06~'08) 54 → ('09~) 66
 - 밭기반정비율 : ('05) 63% → ('08) 74 → ('13) 100
 - 농업용수등 자원관리
 - 통합적 지하수 관리체계구축 : ('04~'05) 5% → ('06~'08) 20 → ('13) 50
 - 해수침투관측망설치 : ('04~'05) 58% → ('06~'08) 78 → ('11) 100
 - 농업기계화 사업
 - 벼농사기계화 : ('04~'05) 90% → ('06~'08) 92 → ('09~) 95
 - 밭농사기계화 : ('04~'05) 47% → ('06~'08) 50 → ('09~) 54
 - 노지채소 농기계임대사업 : ('06) 150대 → ('09) 2,763 → ('13) 2,943
- 다양한 소득원 발굴**
- 농촌관광 : ('04) 76개 마을 → ('08) 538 → ('09~) 1,000

- 농촌관광인구 : ('05) 68백만명 → ('08) 100 → ('11) 146
- 농공단지조성 : ('04~'05) 304개소 → ('06~'08) 344 → ('09~) 394

□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농어민 건강보험 지원 : ('05) 보험료 40% → ('06) 50 → ('09~) 50
- 농업인 안전공제지원(가입률) : ('04~'05) 조합원 29% → ('06~'08) 38% → ('09~) 40%
- 농업인 재해예방 및 지원체계
 - 건강관리실 지원 : ('04) 884개소 → ('06~'08) 1,500 → ('09~) 1마을 1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05) 34개소 → ('06) 73 → ('09~) 163
- 농촌마을 종합개발 : ('04~'05) 16개소 → ('06~'08) 256 → ('13) 1,000
- 농촌생활용수공급 확대 : ('04~'05) 4,751개소 → ('13) 7,751
-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 ('04~'05) 185개소 → ('06~'08) 2,000 → ('09~) 3,000
- 폐기물 확충시설 : ('04~'05) 109개소 → ('06~'08) 142 → ('09~) 160
- 농어촌도로 포장율 : ('04~'05) 27% → ('06~'08) 33 → ('09~) 38
- 오지교통 지원 : ('06~'08) 공영버스 700대 → ('09~) 1,422
- 전원마을 조성 : ('04~'05) 44개소 → ('06~'08) 87 → ('09~) 92
- 농촌지역 주체역량 강화
 - 지역혁신리더 육성 : ('06~'08) 1,900명 → ('09~) 3,100
 - 마을리더 육성 : ('06~'08) 1,000명 → ('09~) 46,000

C2007-4

농업비전 2030 증장기 지표 개발

찍은날 2007. 3. 19 펴낸날 2007. 3. 19

발행인 최 정 섭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포럼 Tel. 2242-7120(대)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